

OCTOBER. 2022

VOL. 125

tongsangnews.kr

10

통하는
세상

통상

youtube.com/tongsang

facebook.com/tongsangnews

COVER STORY

글로벌 통상환경의 떠오르는 변수, 기후변화

글로벌 특

EU의 에너지 전환이 부른
에너지 위기

숨고 가이드

기후기술 전문가, 손지희
국가기후기술협력센터 사업개발팀장

통상 아카데미

이슬람과 아랍 세계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

*58개국
FTA 발효 18개 협정

전 세계 GDP 대비

85%

자료: 국제통화기금(IMF)
2021년역내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RCEP)

30.52%

2022년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FTA 현황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2006년
1.35% 유럽연합(EU) 2011년
17.99% 영국 2021년
3.56% 튀르키예 2013년
0.84% 인도 2010년
3.10%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2007년
3.51%
싱가포르, 베트남 협정 포함 한국
1.92% 중국 2015년
17.76% 호주 2014년
1.70% 뉴질랜드 2015년
0.26% 캐나다 2015년
2.12% 미국 2012년
24.16% 콜롬비아 2016년
0.32% 페루 2011년
0.24% 칠레 2004년
0.35% 중미 2019~2021년
0.20%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2019)
엘살바도르(2020), 파나마(2021)바로 보는
통상 관련 사이트FTA 강국, KOREA
fta.go.krTradeNAVI
tradenavi.or.krYesFTA
customs.go.krUNI-PASS
unipass.customs.go.krFTA 종합지원센터
okfta.kita.net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exportcenter.go.kr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

캄보디아 시엠레아프(Siem Reap)에서 지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아세안+3(한·중·일) 경제장관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경제장관회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 등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경제장관회의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돼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아세안 대화 상대국 간에 회의장 안팎으로 우호적이면서도 치열한 경제협력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한국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산업기술·디지털·기후변화 협력, RCEP 활용과 이행체계 구축 등 핵심 통상 현안에 대한 공조 강화에 합의했다. 또한 한국은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와 양자회담을 갖고 희소금속·원자재 공급망 및 원전·에너지 협력, FTA 서명 및 이행 점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참여 등 각국과의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아세안 관련 회의체별 참여국

ASEAN					ASEAN+3	RCEP (ASEAN+5)	EAS (ASEAN+8)	기타 대화상대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한국	 호주	 인도	 영국(불참)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국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

제19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 ★교역과 투자 원활화 및 공급망 연계성 강화에 합의
-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설립에 양해각서(MOU) 확정

제25차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

- ★아세안+3 경제협력 워크 프로그램 '2023-2024 계획' 채택
- ★RCEP 활용 제고, 디지털 경제, 중소기업 역량 향상 협력 강화

제10차

EAS 경제장관회의

- ★WTO 각료회의(MC12) 각료선언 및 각료결정 긍정 평가
- ★코로나19 이후 회복, 파리협정 이행 위한 협력 확대

제1차

RCEP 장관회의

- ★회원국의 RCEP 활용 증진을 위한 추진상황 공유
- ★RCEP 이행체계 구축 논의
- ★RCEP 활용한 역내 경제통합

CONTENTS

OCTOBER, 2022

※〈통상〉에 실린 내용은 필자의 견해이므로
필자의 소속 기관이나 본지의 공식 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열린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회의장. 무대 위에 시리아 난민 소녀를 상징하는 3.5m 높이의 대형 인형 '리틀 아말'(아말은 아랍어로 '희망'이란 뜻)이 서 있다.



20



22



24



28



32



38



42

COVER STORY

글로벌 통상환경의 떠오르는 변수, 기후변화

02
FTA 한눈에

03
글로벌 브리핑

06
미리 보기
키워드로 읽는 기후변화 통상 이슈

08
깊이 보기
새로운 통상질서의 한 축, 기후변화

14
키워드 토크
기후변화 위기 속 탄소 무역장벽 현실화
탄소중립 향한 국가 차원 대응방안 모색

18
정리하기
기후변화가 가져온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

발행일 2022년 10월 1일(통권 제125호) 발행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2동 13층 산업통상자원부(044-203-4893) 제작협력 한국경제매거진㈜ (02-360-4816)

20
판례로 보는 통상
환경과 경제 사이의 딜레마:
③참차-돌고래 분쟁2

22
숨고 가이드
기후기술 전문가,
손지희 국가기후기술협력센터
사업개발팀장

24
글로벌 특
EU의 에너지 전환이 부른
에너지 위기

28
한국 대표선수
세계속 한글과 한국어

30
해외무역 지상중계
(주)예산테크

32
역사의 수레바퀴
금본위제와 기축통화
영국 파운드의 등장

34
응답하라 무역정책
물류 전용 수출 바우처로
물류비 부담을 줄여드려요

36
글로벌 트렌드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

38
통상 아카데미
이슬람과 아랍 세계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

42
FTA Analysis
수출기업을 위한 한·아세안
FTA 살펴보기

44
공급망 A to Z
수소경제 시대,
수소산업 가치사슬 이해하기

46
글로벌 통상 뉴스
통상교섭본부장,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양자회담
'IRA' 등 논의 외

48
통상백과
세미나 '글로벌 에너지 동향과
시사점' 외

50
소통 마당
독자의견, 이달의 퀴즈

키워드로 읽는 기후변화 통상 이슈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환경 관련 의무조항을 강화하면서 기후변화 등 환경 이슈가 통상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도 '탈탄소와 청정에너지'가 주요 의제 중 하나다. EU도 2019년 발표한 유럽 그린딜의 목표달성을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통상규범을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 EU 등 주요국의 기후변화 관련 통상정책의 동향과 쟁점을 △신기후체제 △CBAM △IPCC △RE100 등 4가지 키워드로 살펴봤다.



KEYWORD 1 신기후체제

신기후체제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2020년 만료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대체할 새 기후변화체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문이다.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 협약(UNFCCC)의 21번째 당사국총회에서 도출된 합의문이어서 '파리협정'이라고도 부른다.

교토의정서에 합의된 기후변화체제는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 혁명 이전보다 2℃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노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가 높은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량을 설정해 목표를 달성하고, 개발도상국 등은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나서는 방식을 통해서다. 신기후체제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한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넘어 서서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감축 의무를 부과한 첫 기후협약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KEYWORD 2 탄소국경조정제도

EU는 지난해 7월 기후 대응 법안인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CBAM 시행을 예고했다. 올해 6월 유럽 의회 및 이사회에서 수정안을 발표했고 향후 집행위, 유럽 의회, 이사회 간 협의로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배출권거래제(EU ETS)에 따른 탄소비용을 부과해 징수한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로 이전하는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자국의 산업 경쟁력 약화 대응, 글로벌 기후 합의 사항에 타국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EU 집행위와 이사회 법안 초안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를 비롯한 5개 항목에 적용될 것으로 예고했으나, 유럽 의회는 플라스틱, 유기화학품, 수소, 암모니아 등 4개 품목의 추가를 제안했다. 또한, 유럽 의회는 집행위와 이사회 안과는 달리 적용 배출범위를 직접배출에서 전기 생산에 따른 간접배출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향후 기관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해 어떻게 합의안을 도출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KEYWORD 3 IP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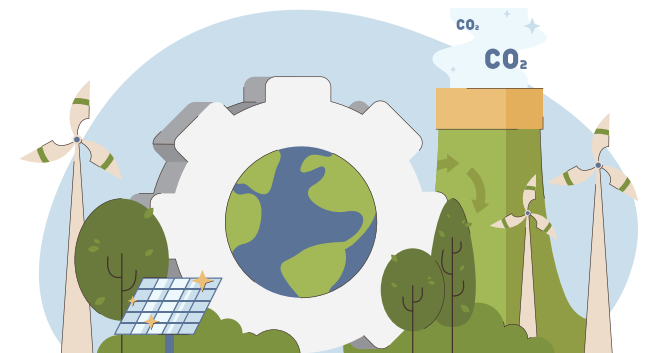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1988년에 공동으로 설립한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다. 기후변화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는 곳으로 명성이 높다. 특히 최고 전문가 수백 명이 참여하는 평가보고서는 전 세계 기후변화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1990년에 발간된 제1차 평가보고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1995년 발간된 제2차 평가보고서는 교토의정서에, 2014년 발간된 제5차 평가보고서는 파리협정에 채택되는 등 주요 기후협약의 이론적 근거가 됐다.

최신 버전인 제6차 평가보고서는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발간되고 있다. 제1실무그룹 보고서(WGI; Working Group I)는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제2실무그룹 보고서는 기후변화 영향·적응 및 취약성, 제3실무그룹 보고서는 기후변화 완화를 다뤘다. 2022년 10월 안으로 이를 종합한 최종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다. 이번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는 현재 각 국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한다 해도 산업화 이전 대비 추가적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억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망, 세계 각국이 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근거를 제공했다.

KEYWORD 4 RE100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다국적 기업들의 자발적인 약속이다. 2014년 영국의 비영리단체인 '기후그룹'과 '탄소공개프로젝트'가 처음 제시했다. 기업 입장에서 RE100 참여는 생산비용 상승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부담이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각종 규제 법안이 발효되면서 넷제로(탄소중립) 흐름에 동참하지 않는 기업에 더 큰 불이익이 부여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2022년 7월 기준 RE100에 가입한 전 세계 기업은 구글과 애플, 제너럴모터스(GM), 이케아 등 376곳으로 2014년(13곳)에 비해 크게 늘었다. 한국 기업은 2020년 6곳에서 2년 만에 21곳으로 증가했다.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SK그룹을 시작으로 미래에셋증권, KB금융그룹, LG에너지솔루션 등이 동참했다. 올해 들어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KT, LG이노텍 등이 합류했다. 최근 삼성전자도 RE100 가입 선언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가입 1년 안에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받는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60%, 2040년 90%로 올려야 자격이 유지된다. [5]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의장국: 영국). COP26 참여국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 1.5℃(산업화 이전 대비)이내 억제를 위한 △석탄 사용 단계적 감축 △화석연료 보조금 중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채택했다.

새로운 통상질서의 한 축, 기후변화

기후변화의 통상 의제화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체제가 가지는 본질적 한계에서 비롯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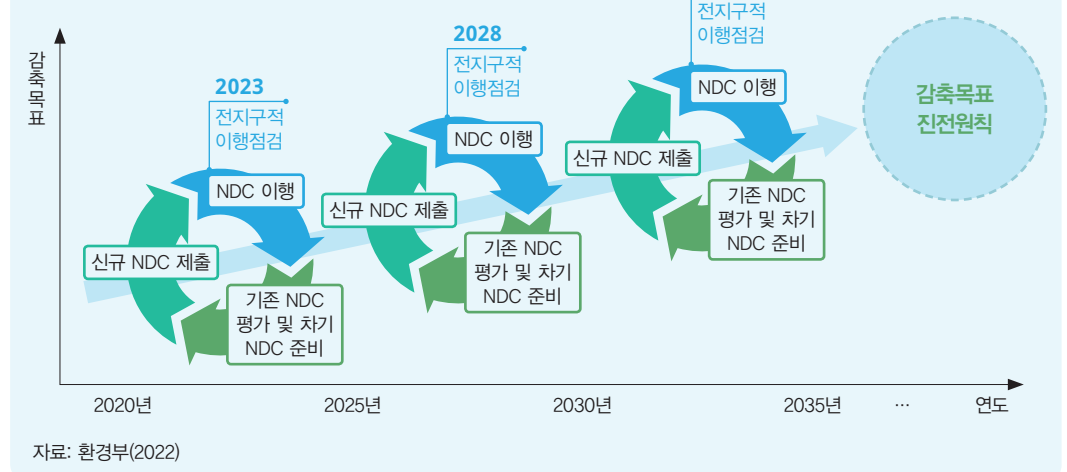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 이행강제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가장 실질적인 수단으로 대두된 것이 통상규제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존 통상질서가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불안정하며 나아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구축되고 있는 통상질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글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사진 한경DB

기후변화 문제가 통상 이슈의 의제로 대두된 배경에는 신기후체제라고도 불리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체제가 가지는 본질적 한계가 있다. 파리협정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근간이다. 현재 전 세계는 파리협정 안에서 공동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공유하고 함께 노력하고 있다. <도표 1>에서 보듯 파리협정 체제는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해 제출하고 이행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주기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2023년부터 5년마다 전 지

<도표 1> 파리협정의 구조



절차)을 통해 목표를 상향해 나가도록 설정된 구조로 돼 있다. 즉 이행점검 등의 요소가 있으나 근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는 책임은 당사국의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한 이행강제력(enforceability)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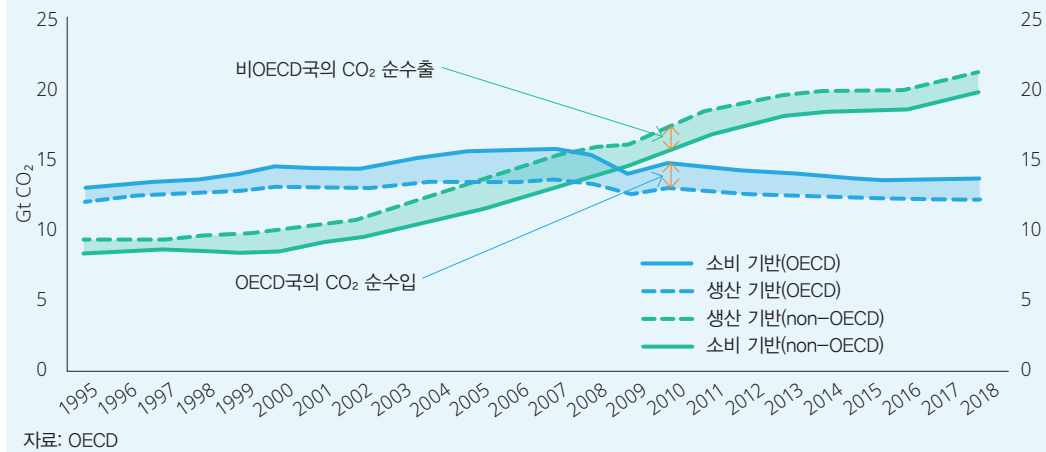
통상규제가 기후변화 대응의 실질적인 수단으로 기능

이에 대해 학자들은 파리협정의 구조는 근본적으로 무임승차자의 문제(free rider's problem)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파리협정 체제는 전 세계 공동의 노력이 절실한 기후변화 대응의 문제에서 자국의 감축 의욕을 낮게 설정하고 타국의 감축 노력으로 인한 편익을 취하려는 무임승차자의 문제에 대해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가장 실질적인 수단으로

대두된 것이 통상규제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통상규제가 기후변화 대응의 실질적인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까닭은 글로벌 무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살펴보면 비교적 분명하게 확인된다. <도표 2>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OECD 국가의 생산과 소비 기반 CO₂ 배출량을 도식화한 것이다. <도표 2>에서 OECD 국가는 CO₂의 순수입국인 반면 비OECD 국가는 CO₂ 순수출국임이 확인된다. 즉 선진국은 배출하는 것보다 많은 CO₂를 소비하고 개발도상국은 그 반대라는 것으로 결국 개도국의 CO₂ 배출량이 선진국의 소비에 따라 통상을 통해 이전된다는 것이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만약 현재 CO₂ 배출 순수입국이 저탄소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하고 현재 순수출국은 저탄소 제품을 공급한다면 무역에 내재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점차 감소할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에 앞선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무역은 무역왜곡

〈도표 2〉 OECD와 비OECD 국가의 생산 및 소비 기반 CO₂ 배출량

(trade distortion)을 유발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간 감축 의욕이나 규제 강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무역은 잠재적 무역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영국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의 보고서¹⁾에서는 국가 간 서로 다른 환경 기준은 불평등한 시장 조건을 만들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저해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의 기업은 무역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탄소누출²⁾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한 무역 제한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만드는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 무역 제한적 조치 논의는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인 선진국을 중심으로 1990년 중반에 이미 시작됐다. 대표적으로 EU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장기목표를 구상하던

1996년경 이미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 도입을 논의했다. 이후 EU는 2008년 EU기후·에너지 패키지를 도입할 때, 기후 정책이 느슨한 국가가 EU와의 무역을 원하면 EU의 배출권을 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탄소국경세 도입을 공론화한 적이 있으며 미국에서는 국경세 도입 내용을 포함한 청정에너지안보법(ACES;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이 2009년 6월 미국 하원을 통과했으나, 이후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지진 못했다.

당시에는 개도국의 강력한 반발과 선진국 간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예를 들어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은 탄소국경세는 세계무역기구(WTO) 및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중국은 수입품에 탄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일부 선진국이 WTO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교토의정서의 선진국과 개도국 간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BDR;

1) UK Board of Trade (2021), Green Trade
2) 탄소누출(carbon leakage): 특정 국가 혹은 지역의 탄소 감축 정책 시행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원이 역외로 이탈하는 현상

EU 입법기관별 CBAM 시행안 비교

	집행위 안(案)(2021.7)	이사회 안(案)(2022.6 확정)	의회 안(案)(2022.6)
적용품목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집행위 案과 동일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내 일부 하위품목 추가)	집행위 案에 유기화합물,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추가
시행시기	2026년 1월 (3년 시범: 2023~25년)	집행위 案과 동일	2027년 1월 (4년 시범: 2023~26년)
무상할당 축소	2026년 개시-2035년 완전폐지 (10년간 10%p씩 감축)	2026년 개시-2035년 완전폐지 (단 감축률을 가속화하고 있는 부분에서 집행위 案과 차이)	2027년 개시-2032년 완전폐지
배출범위	직접배출만 포함	집행위 案과 동일	간접배출(전력소비에 의한 배출)까지 포함
운용부처	EU 회원국별 총 27개의 등록처 (national registries)	중앙집중식 기관 설립	중앙집중식 'CBAM 등록처 (CBAM registry)' 설립
기타		CBAM 의무 면제기준(150유로 미만 제품) 도입 제안	수출 리베이트 제도 도입

자료: 법무법인 율촌(2022.7)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원칙에 위배됨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기후변화 대응에 기반한 무역 제한적 조치의 동력은 과거보다 훨씬 강력하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탄탄해졌으며 앞서 언급한 대로 선진국은 기존 통상질서가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불완전하며 나아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결국 기후변화 대응에 기반한 통상규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전에 비해 실질적인 당위성을 확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 목적의 직접적 무역규제조치 확대 예상

기후변화 대응을 통상에 접목한 무역 관련 정책 및 조치의 대표적인 사례는 EU가 준비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다. CBAM은 EU의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ystem)를 활용해 도입된다. 역내로 제품 수입 시 수입업자가 수입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따라 EU 배출권 가격에 상응하는 CBAM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 관할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국내 생산자와 수입업자가 상응하는 탄소 가격을 부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EU의 CBAM 시행안은 EU 집행위, 이사회, 유럽 의회의 안을 토대로 합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으로 EU가 발표한 일정대로라면 내년부터 시범시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 기관의 시행안을 비교하면 집행위의 안보다는 의회 안이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품목수, 간접배출 등)를 포함하고 조기에 빠른 속도로 무상할당을 축소하는 등 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세 입법기관의 안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온실가스 다(多)배출 품목을 중심으로 일정 기간의 시범기간을 거쳐 2020년대 후반기에는 본격 시행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무역 규제적 조치가 실현되는 효시가 될 것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유사한 조치에 대한 논의가 점차 등장하고 있는데 캐나다와 영국도 최근 CBAM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FTA 등 양자 협정에서도 협정문에 기후변화 대응 관련 조항이 반영되거나 보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무역에 관한 협력 조항이 삽입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EU·싱가포르 경제 파트너십 협정(EU-Singapor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서는 “환경 정책의 무역 관련 사항에 대해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³⁾”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영국은 향후 체결하는 FTA에 저탄소 제품과 서비스의 무역 증진 등 기후와 통상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저탄소 제품의 시장형성을 위한 정책 확산은 글로벌 통상에 간접적 영향

직접적인 국경조치는 아니나 저탄소 제품의 시장 창출을 위한 정책도 활발하다. 저탄소 제품의 시장 창출을 위한 정책으로 글로벌 통상에 영향을 줄 만한 대표적인 사례는 녹색 공공조달(Green Public Procurement)을 들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청정 조달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는 대표적 국가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17년 ‘Buy Clean California Act’(일명 청정구매법)를 제정해 공공 인프라 계약에서 소비되는 소재 제품의 탄소배출량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재(고탄소 제품)가 공공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이를 행정명령 등을 통해 연방 차원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글로벌 협력도

캘리포니아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대상 소재제품의 탄소 배출량 기준

제품군	하위 구분	배출집약도 기준 (tCO ₂ e/ton)
Steel	Hot-rolled sections	1.38
	Hollow structural sections	2.83
	Plate	2.12
Concrete reinforcing steel		1.06
Flat glass		1.72
Mineral wool board insulation	Light density	4kg/m ²
	Heavy density	9.79kg/m ²

자료: BNEF(2021)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U도 자발적 제도로 녹색 공공조달 제도를 운영 중인데 20여 개 이상의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등 회원국 간 제도의 일치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녹색 통상을 위한 글로벌 표준에 대한 논의에 주목

한편, 기후변화 대응을 통상 차원에서 구현하기 위한 글로벌 표준 등에 관한 논의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글로벌 통상에서 저탄소, 고효율 제품 등의 시장이 확대되는 정책이나 조치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저탄소 제품의 정의나 측정방법 등에 대한 글로벌 표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제품 내재 탄소배출량(embedded emission) 측정체계는 앞서 거론한 탄소국경조정, 녹색 조달 등 기후 관련 통상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기능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미(美)·EU 무역기술위원회(US-EU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 작업반2(WG2)의 논의는 눈여겨볼 만하다. TTC

3)*recognise the importance of working together on trade-related aspects of environmental policies...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새로운 기후협정으로 파리협정이 채택됐다.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지 18년 만의 일이다.

WG2는 녹색 조달과 관련해 녹색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정부 조달 정책 및 절차, 탄소발자국 산정 방법론 측면에서 제품에 결부된 탄소발자국 산정 방법론의 일치성 향상, 전기자동차의 확산 및 전기차-전력망 연계기술(V2G; Vehicle to Grid) 통합을 위한 공통의 기술(충전소) 기준 등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있다. 결국 세 핵심 분야의 논의는 녹색무역을 강화하거나 녹색기술 확산을 위한 국제적 게임의 규칙(rule)을 설정하고 주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사한 사례로 청정에너지장관회의 산하의 IDDI(Industrial Deep Decarbonization Initiative)도 철강, 시멘트, 콘크리트 등의 제품에서 무(저)탄소 제품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개발하고 관련 보고나 인증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국제 협력체다.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구축되고 있는 통상의 질서는 결국 저탄소 제품 시장이 확대되면서 그렇지 않은 제품이 불리해지는 방향일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확산되는 통상규제는 온실가스 배출이 많으며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이 용이한 산업의 제품이 우선 영향을 받을 것이다. EU CBAM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 철강, 알루미늄 등 소재 제품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므로 이들 산업을 출발점으로 차분히 대응책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품 내재 탄소배출량 측정체계 마련이 중요

기후 관련 통상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선 과제는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을 측정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생산단계뿐만 아니라 원료나 중간재 수급 등 제품의 수명주기를 포함하는 접근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면 자체 배출량뿐만 아니라 제품 공급망에서의 배출량에 대한 이해와 정보도 필요하게 된다. 기업은 제품의 내재 배출량에 대한 측정·보고·검증(MRV;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체계를 잘 구축하고 정부는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인증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점차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실현되는 통상규제에 대한 논의는 더욱 다양화되고 활발해질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저탄소 제품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기후변화가 만드는 통상질서에서 경쟁우위를 가지는 분명한 길이다. 한편, 이러한 논의가 일방적인 보호주의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와 관련 통상 의제에서 여러 나라와 폭넓은 논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해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⁵⁾

기후변화 위기 속 탄소 무역장벽 현실화 탄소중립 향한 국가 차원 대응방안 모색

기후변화 문제가 국제사회의 핵심 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역시 변화의 흐름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탄소 무역장벽화가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국제 기후변화 대응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적 흐름을 읽고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대담을 마련했다.

진행 김광균 기자 사진 박충렬



대담자



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

토론 제시어

#1

국내외 기후변화 관련 입법 및 제도화 현황

#2

글로벌 환경규범 확대, 국내 영향은?

#3

대응방안 및 시사점

#1 국내외 기후변화 관련 입법 및 제도화 현황

정서용 교수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가 논의되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체결 이후부터다. 이후 교토의 정서를 거쳐 현재 기후변화 이슈를 견인하고 있는 파리협정에 이르렀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은 지난해 비로소 시행되기 시작했다. 기존 교토의정서가 규제 중심의 어젠다 세팅에 의미를 뒀다면 파리협정은 구체적인 이행에 초점을 맞췄다. 파리협정 체제하에서는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 기술 개발과 투자 등이 활성화되면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결과로 이어지게 돼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통상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자국의 산업을 진흥시키고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다 보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커다란 통상 장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내놓은 '유럽 그린딜(Europe Green Deal)'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3월 25일부터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긴 했지만 산업 부흥보다는 규제 측면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은혜 팀장 기후변화를 둘러싼 입법 움직임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사안이라면 유럽의 그린딜과 미국의 그린뉴딜, 바이든 대통령 당선 직후 미국의 파리협정 복귀를 꼽을 수 있다. 2019년 말 유럽의 그린딜 발표 이후 많은 국가가 탄소중립 동참을 선언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2020년 말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또한 2021년은 파리협정이 실제로 시행되면서 신기후

체제가 시작된 해이기도 하다.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는 단순히 저탄소 사회를 넘어 탄소중립이라는 비전 이 국제사회에서 당위성을 갖도록 하고 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별 감축목표 설정은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관련 입법 및 제도화에 적극 나서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미국의 인프라 투자법 및 일자리법(IIJA)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제사회 공동의 문제의식을 담는 동시에 탄소중립 선언 이후 자국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공격적인 법·제도 도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3월부터 탄소중립기본법을 시행 중이다. 이전의 녹색성장기본법과 달리 탄소중립 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2030년 감축목표를 명시하는 등 파리협정에서의 이슈들을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자국의 산업을 진흥시키고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다 보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커다란 통상 장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Climate Change)

온실가스 배출 제한으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동의한 협약이다. 1992년 6월 리우회의에서 채택돼 1994년 3월 21일 발효됐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가입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1995년부터 매년 1회 당사국 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를 개최한다.

법령 안에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특
징적이다.

#2 글로벌 환경규범 확대, 국내 영향은?

정서용 교수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반대하겠다고 나서는 국가 리더는 없다. 기후변화 대응은 거부할 수 없는 중요 어젠다이기 때문이다. 유엔을 중심으로 특별 예외 규정을 통해 보호받는 개도국을 제

외하면 한국이나 중국처럼 미국, 유럽과 경쟁하거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국가들이 탄소중립과 관련한 통상장벽의 영향권 내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각국이 어떠한 스탠스와 전략으로 대응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아직까지는 대체로 관망하는 분위기다. 다만 CBAM이나 IRA 등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언론에 의해 다소 부풀려진 측면도 있다. 이러한 입법 움직임은 결국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일방적인 행태인데 국제적으로 통상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시대에서 과거처럼 강대국이 힘

으로 굴복시키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다자간 규범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제 막 파리협정이



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미국의 인프라투자법 및 일자리법(IJA)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은 국제사회 공동의 문제의식을 담는 동시에 탄소중립 선언 이후 자국의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공격적인 법·제도 도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파리협정(Paris Agreement)
2020년 교토의정서가 만료된 후,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 2015년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고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실천하자는 협약이다.

시행된 상황에서 일반적인 규범이 확립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점을 인식하고 우리나라도 룰 메이커로서, 협상력을 가진 하나의 플레이어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강대국의 통상 압력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던 과거와는 달리 우리의 국제적 위상도 상당히 높아졌다. 우리의 힘만으로 어렵다면 이해관계가 맞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대응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협력의 계기도 만들어갈 수 있다. 또한 무역에 영향을 주는 기후변화 대응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환경과 무역에 대한 논의의 구체화를 통해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장은혜 팀장 기후변화 대응 문제에서 EU와 미국이 중심이 돼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갖는 당위성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EU와 미국이 주도하는 정책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움직임을 찾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국제

적인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탄소누출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무력화 문제는 무역협정에서 환경규범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제통상 규범과의 충돌이나 국가 간 통상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에 대해

10여 년 전부터 꾸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실제 국가 간 심각한 충돌이나 분쟁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상 규범에서 충돌이나 분쟁이 실현되려면 탄소누출 문제에 대한 반박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탄소중립을 선언한 각국이 이를 공식적으로 반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통상 측면의 환경규범 확대에 의한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3 대응방안 및 시사점

정서용 교수 기후변화 대응 문제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국제통상 환경에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담당 부처 내에서 기후변화와 통상 간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부처와 협력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기후변화 문제를 어젠다화해야 한다. 큰 그림을 그리며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범부처 차원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정부가 입법을 추진한다고 하면 기후변화와 에너지 이슈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외교 이슈와 관련한 법안 발의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 통상 측면의 문제는 산업부가 다루겠지만 EU와 기후변화 협정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면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



관련 부처와의 협력도 고려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통상 간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부처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어젠다화할 필요가 있다.**”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한 개념이다. 환경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은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동의 책임을 가져야 하나, 산업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주요 선진국들이 더 큰 책임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차별화된 책임’에 동의했다.

장은혜 팀장 환경규범 강화에 대해 통상규범과의 충돌 가능성을 분석해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분쟁화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협상 테이블에서 소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의제가 갖는 당위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EU나 미국 등이 환경규범 강화로 통상압력을 가할 때 ‘차별화된 책임’을 들고 협상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지 않

다. 그보다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규제를 분석해 통상 차원의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국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환경규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국내에서 산업계가 실질적으로 적용받고 있는 환경규제가 상당하지만 국제사회 환경규범과의 관계에서 정확한 비교군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국내 환경규제와 국제 기준과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향후 법·제도적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팀장]**

기후변화가 가져온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

기후변화는 더 이상 환경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다. 자본주의 질서를 바꾸며 국제사회 흐름을 좌우하는 통상 이슈로 부상했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각료선언문에도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층 강화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조정제도)는 '신보호무역' 우려를 낳고 있다. RE100은 글로벌 기업 경영의 핵심요소가 됐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IPEF 필라3 청정경제(Clean Economy)

한국, 미국 등 IPEF에 참여한 14개국은 지난 9월 개최된 IPEF 장관회의를 통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 각료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이 중 청정경제 분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2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가 제품을 수입할 때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탄소배출권거래제(EU-ETS)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다. 최근 유럽 의회는 집행위와 이사회 안에 비해 규제품목, 범위 등을 확대하는 강화된 초안을 발표했다.

EU CBAM의 집행위원회 입법안과 의회 수정안 비교

	집행위원회 입법안(2021.7)	의회 수정안(2022.6)
규제품목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집행위원회 입법안 +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배출범위	직접배출(Scope1)	직접배출(Scope1)+간접배출(Scope2)
도입시기	2026.1(시범기간: 2023.1~2025.12)	2027.1(시범기간: 2023.1~2026.12)

3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속 기후변화 대응책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는 기후변화 대응책이 포함돼 있다. IRA의 기후변화 부문에 따르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2005년 대비)을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750억 달러를 투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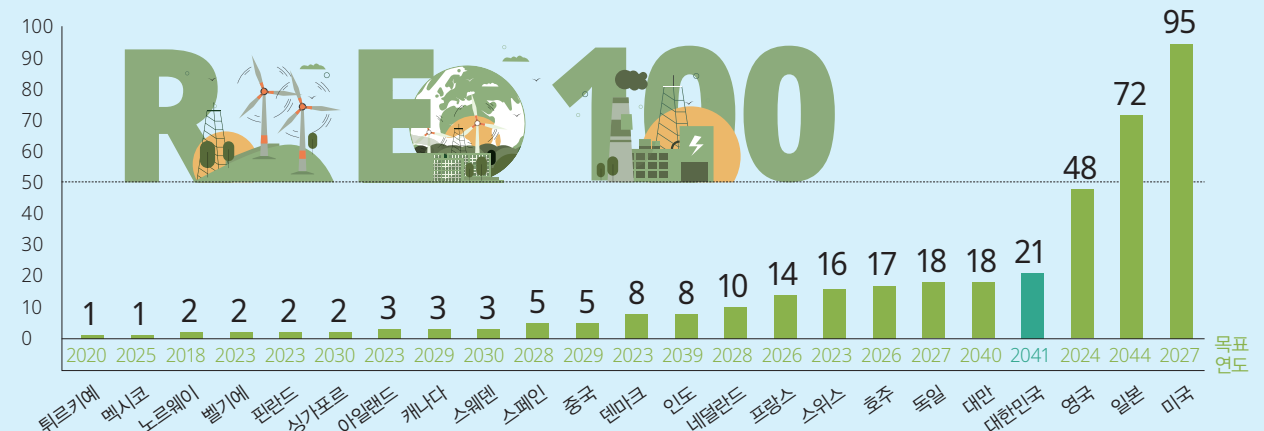


4

수출기업 경영의 핵심요소로 부상한 RE100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국제적 캠페인이다. 국제법이나 협약은 아니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수출기업에는 경영의 핵심요소가 됐다. RE100 지위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국가별 RE100 목표 연도(숫자는 2022년 7월 현재 RE100에 가입한 기업 수)



자료: www.there100.org(2022년 7월 5일 조회 기준)

환경과 경제 사이의 딜레마: ③참치-돌고래 분쟁2

지난 호에서 다룬 1991년의 ‘참치-돌고래 분쟁’은 당사국인 미국(피소국)과 멕시코(제소국)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에 함께 참여하면서 정치적 고려가 더해진 결과 미국의 최종 패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이 채택되지는 않았다. 이후 1994년 NAFTA는 성공적으로 발효됐지만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시대가 열리면서 양국은 같은 문제로 재충돌한다.

글 박정준 강남대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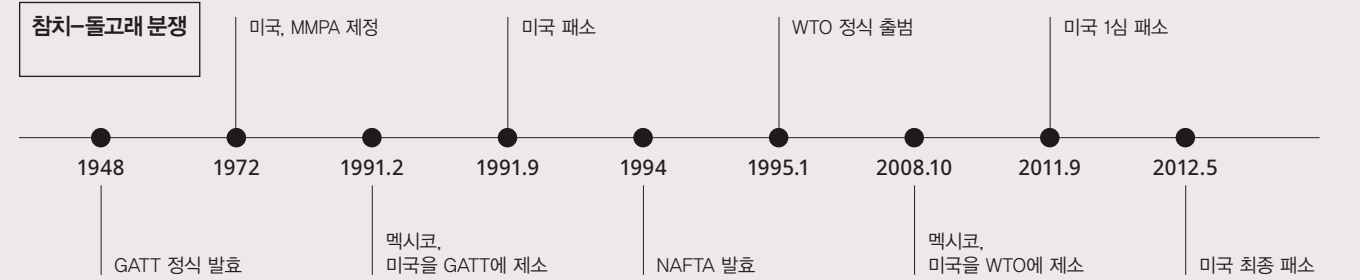
1991년 멕시코가 미국을 GATT에 제소하면서 문제의 원인으로 부상한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은 분쟁해결 기구 패널의 판단상 미국이 국제통상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결났다. 비록 참치잡이 과정에서 혼획(bycatch)으로 희생되는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는 하나 GATT가 지향하는 자유무역의 높은 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난 셈이다. 각종 환경단체의 맹렬한 비난이 이어졌음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미국에게 돌고래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사안이었다.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환경보호의 가치가 퇴색될 수 없는 것이 이유다. 오히려 환경보호에 대한 목소리는 세월이 흐르면서 더 높아졌다. 이에 미국은 과거 GATT ‘참치-돌고래 분쟁’ 패소의 쓰라린 기억에서 교훈을 얻은 덕분에 이번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동일한 목표 달성을 도모하게 된다. 바로 미국 공식 규격의 ‘돌고래 안전(dolphin-safe)’ 라벨링 제도의 도입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라벨링은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미국 내 소비자에게 해당 참치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돌고래가 적절하게 보호됐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였다. 공해에서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나 특정 해역 밖에서 건착망을 사용하면 라벨링 부착을 금지하는 등 제법 까다롭고 엄격한 기준을 정해 돌고래 보호에 진심인 미국인의 높은 소비 눈높이를 만족시켜주는 나름의 신뢰성을 가진 제도로 각광받았다. 라벨링이 없는 참치제품은 마치 환경보호에 미온적인 기업이 생산한 것이고 따라서 소비자의

외면을 받아 시장에서 불리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멕시코는 미국을 라벨링과 관련된 무역기술장벽(TBT) 위반으로 WTO에 제소하게 된다.

국제표준의 중요성

여러 쟁점 중 특히 주목받은 것은 전미열대 참치위원회(IATTC)에서 채택한 국제돌고래보호제도협정(AIDCP)이다. 이에 따르면



자료: 국제법·통상법 해설 포털(<https://disputecase.kr/>)

일정 요건을 갖추 경우 건착망을 사용해도 돌고래 안전 라벨링이 허용된다는 사실이 었다. 참고로 미국과 멕시코 모두 IATTC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멕시코는 AIDCP의 라벨링 기준에 비교할 때 건착망 사용을 완전 금지하고 있는 미국의 라벨링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주장했다.

라벨링과 같은 기술적 제도(기술규정)는 관련된 국제표준을 기초로 해 WTO 회원국 간

무분별한 제도 남발을 어느 정도 방지하도록 했는데(TBT협정 제2.4조)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멕시코는 미국의 라벨링과 국제표준(AIDCP) 간 상당한 괴리를 지적했고 미국은 AIDCP가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의 국제표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1심(패널)과 최종심(상소기구)은 양국의 의견 차이만큼이나 거리가 있는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전자는 AIDCP가 행정과 제도, 특히 개방성, 투명성 등을 근거로 국제표준의 자격을 인정한 반면, 후자는 AIDCP 가입 과정에서 거치는 ‘초청’이라는 절차를 볼 때 모두에 대한 차별 없는 개방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제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부족하다고 판결,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결과는 2연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쟁점들에 대한 판결로 이 분쟁은 미국의 최종 패소로 종결됐다. 미국 입장에서는 지난 GATT 분쟁 패소의 악몽이 재연된 셈이다. ‘참치-돌고래 분쟁’에 한정하면 2연패지만 그전 ‘새우-바다거북 분쟁’까지 생각하면 경제-환경 통상분쟁에서의 3연패다. 결코 반가울 수 없는 해트트릭이다. 그러나 오늘날 환경을 무시한 생산활동은 분명 소비자의 외면을 받는다. ESG 경영도 중요한 화두로 부상했다. 세상은 변했다. 

돌고래 안전(dolphin-safe) 라벨링
소비자에게 해당 참치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돌고래가 적절하게 보호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마크.



자료: 「『미국-멕시코 참치분쟁』에 대한 WTO판결 분석」(김민정, 국제경제법연구), 「국제통상분쟁사례이해」(박형래, 도서출판 청람) 및 인터넷 자료.

인류 공영을 위한 기후기술 협력의 가교

기후기술 전문가, 손지희 국가기후기술협력센터 사업개발팀장

기후기술 전문가는 크게 기술개발 전문가와 국제협력 전문가로 나뉜다. 기후위기에 대응해 인류가 공영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나비의 날갯짓'을 막는 기술도 필요하고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잠재울 국제적 협력도 필요하다. 녹색기술센터 국가기후기술협력센터 사업개발팀 손지희 팀장으로부터 기후기술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들어왔다.

글 이나영 기자 사진 이소연



● 기후기술 전문가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기후기술은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기술을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술과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기술이에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나 탄소 저장기술은 온실가스 감축기술이고, 홍수 피해를 막는 기술이나 기후위험 조기 경보 기술은 기후변화 적응기술에 해당합니다. 기후기술 관련 전문가의 역할은 다양합니다. 기술을 개발하는 전문가, 그 기술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전문가, 기후기술을 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해 투자를 유치하는 전문가, 그리고 기후기술이 해외 또는 국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전략을 개발하고 국가 간 협력을 도모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기후기술을 해외에 확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기후기술 관련 국제협력 수행 사례를 소개해주세요.

● 유엔 산하 기후기술기구인 CTCN(Climate Technology Centre & Network)이 추진하는 기술지원(TA)사업이 있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아래에서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파악해서 기술지원을 요청하면, 저희가 CTCN을 통해 그 요청을 받아 개도국의 기술지원 수요를 분석하고 검증하며, 우리나라 기술이 들어갔을 때 어떤 사업이 가장 효과적인지 판별한 다음, 그 사업을 우리가 기획해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수행하는 사업으로는 라오스의 녹색교통 수립사업, 우즈베키스탄의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베트남의 친환경 폐비화 사업들이 있습니다.

● 신기후체제에서 수출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논의되는 국제적인 논의 흐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탄소국경세나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에 입각해 기업이 꼭 알아야 하고 또 선발적으로 전략을 구상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탄소국경세는 물건을 만드는 모든 밸류체인에서 탄소가 얼마나 발생했느냐를 중요하게 산정하기 때문에 관련 기업뿐 아니라 협력 파트너 기업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 ESG는 그 기업에 투자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ESG 경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에서 한국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아직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 개발도상국에 속해 있어서 개도국 입장을 대변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후대응 관련 선진기술을 갖고 있고 재원도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도국에 우리나라 기술도 제공하고 우리나라를 표본 삼아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을 구사하고 있죠. 다만 저희가 목표를 매우 높게 잡아서 열심히 달려야 하는 시점이기는 하지만 너무 급하게 달리다 보면 탈이 나기 마련이므로 국가 차원에서 공론화를 통해 차근차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



인터뷰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지면에서 못다 한 이야기는 유튜브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1 기후기술에 대한 지식

기후기술 전문가가 되기 위해 꼭 특정한 전공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녹색기술센터 연구원의 경우 공학도 출신이 절반이고, 이 외 경제학·정치학·사회학·국제개발학 전공자 등 매우 다양한 인력이 있다. 다만 업무 특성상 기후기술 관련 이해도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지식적 소양이 필요하다.

2 유관 업무 경험

기후기술 전문가가 가장 유념해야 할 키워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다. UNFCCC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논의들에 옵서버(observer)로 참여한 경험, 학교에서 교수님과 함께 기후기술 관련 연구에 참여한 이력, 국제기구에서 인턴을 해본 경험 등이 있다면 기후기술 전문가가 되는 데 유리할 것이다.

3 어학 능력

국가 간 협력을 도모하는 일인 만큼 영어능력이 중요하지만 필수요건은 아니다. 영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정도라면 업무 수행에 지장은 없다. 또 아프리카나 지중해 연안 국가들 중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이 두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면 좀 더 유리할 것이다.

기후기술 전문가가 되려면 이렇게



EU의 에너지 전환이 부른 에너지 위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고 ‘유럽 기후법’과 ‘핏포55(Fit for 55)’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역내 배출권거래제(EU-ETS; Emission Trading System) 개선안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통한 역외 탄소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일련의 입법 과정은 EU가 우위에 있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 산업을 부흥해 제조업을 EU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EU 중심의 탄소중립 주도권 싸움은 에너지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등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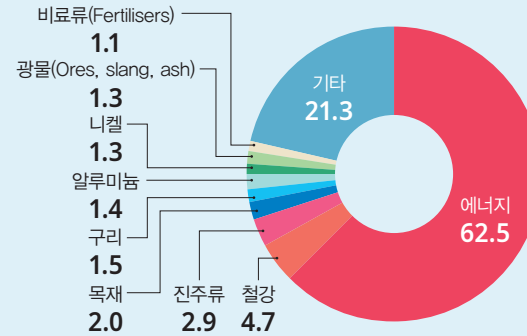
글 조홍중 단국대 경제학과 부교수

2021년 기준 유럽연합(EU)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액이 전체 수입대금의 62.5%를 차지할 정도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다. 에너지 품목으로 보면 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석탄 순으로 높으며 다량의 금속, 구리, 알루미늄, 니켈 등 원자재 수입도 상당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즉 EU는 값싼 에너지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면서 EU 내에서 탄소 관련 생산을 줄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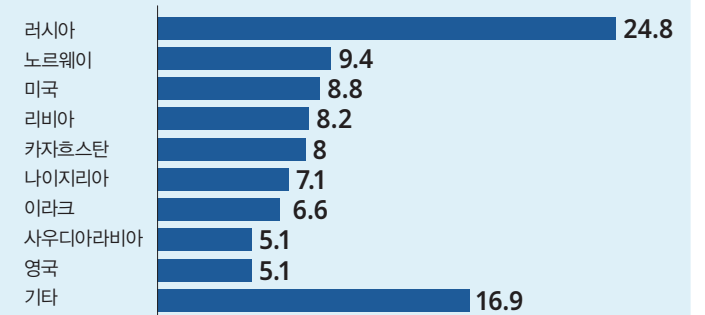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인 파티 비롤(Fatih Birol)이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1970년대 석유위기와는 비견될 수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현재의 위기는 석유 위기임과 동시에 천연가스 위기이자 전력 위기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천연가스를 유럽에 40% 이상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EU는 역사적으로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 형태로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을 늘려왔다.

EU의 대(對)러시아 수입 의존도

수입자원 비중(2021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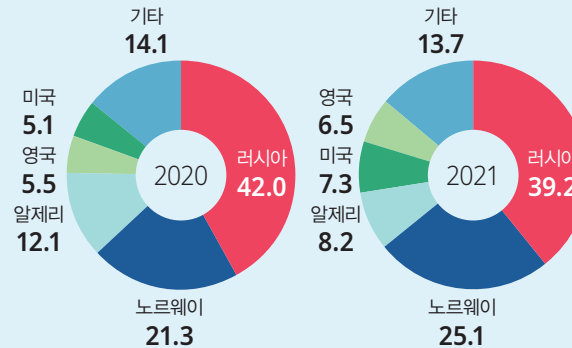


주요 원유 수입국(2021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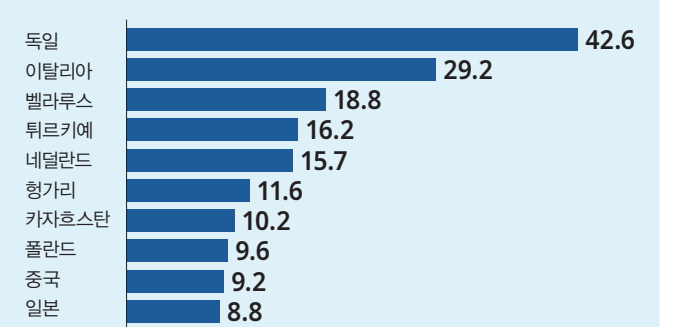


EU의 대(對)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

EU 역외 수입(부가가치 기준 무역, 2020-2021, 단위: %)



세계 각국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2020, 단위: %)



자료: Eurostat & BBC

특히 독일은 전체 수입의 42.5%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관계로 러시아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다. 독일이 러시아와 각별한 사이를 추구한 것은 1970년대 냉전 이후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면서부터다. 즉 독일은 지멘스(Siemens) 등이 파이프라인을 깔아서 돈을 벌고, 러시아는 값싼 천연가스를 독일을 통해 EU에 공급하면서 서로 간의 불안한 공생관계를 유지시켜왔다. 독일은 탈원전, 탈석탄을 진행하면서 재생에너지 일변도의 친환경 정책을 추진했으며 값싼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이용해 탈원전과 탈석탄으로 생긴 전력 공급 미스매치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단적인 예로 독일에는 PNG를 대체할 천연가스 공급방식인 액화천연가스(LNG) 기화기지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다. 불안한 협력관계를

어느 순간 완전히 믿고 에너지 안보를 방기해버리면서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실패의 길을 걷게 된다. 현재도 독일은 원유와 천연가스를 일부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면서 러시아 전비 조달에 협조하고 있는 나라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녹색당 출신 로베르트 하베크(Robert Habeck)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패가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실토하며 독일의 실수라고 자인했다.

EU 에너지 요금 폭등

EU 내 에너지 요금이 가파르게 오르다 못해 폭발하는 수준이다. EU 내 천연가스 현물지수인 TTF는 2020년 최저점

통상을 이끄는 사람들



제13대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제13대 EU 집행위원장(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이다. 2019년 7월 EU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최초의 여성 위원장이다. EU의 우선과제인 기후변화 대응, 4차 산업혁명, 민주주의 강화 등을 추진하는 데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유럽 그린딜, 유럽기후법, Fit for 55를 통해 탄소국경세 등을 도입해 탄소중립과 친환경 중심 산업재편을 이뤄 유럽의 경제 부흥을 이끌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폰데어라이엔은 1958년 벨기에에서 태어났으며 1971년 독일로 돌아와 괴팅겐대학교에서 경제학 공부를 시작했으나 중도에 포기하고 1980년 하노버대 의과대학을 입학해 2002년까지 의과대학 교수를 지냈다. 1990년부터 기독교민주연합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시작했으며 메르켈 정부에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3부처의 장관을 역임하며 독일 내에서는 메르켈의 뒤를 이을 정치인으로 각광받고 있다.

EU 집행위원장으로서는 명분상으로는 친환경 및 탄소중립 정책을 앞세워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EU 역내 국가와 기업들의 우호적인 이해관계만을 강화한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추진해온 EU 집행위원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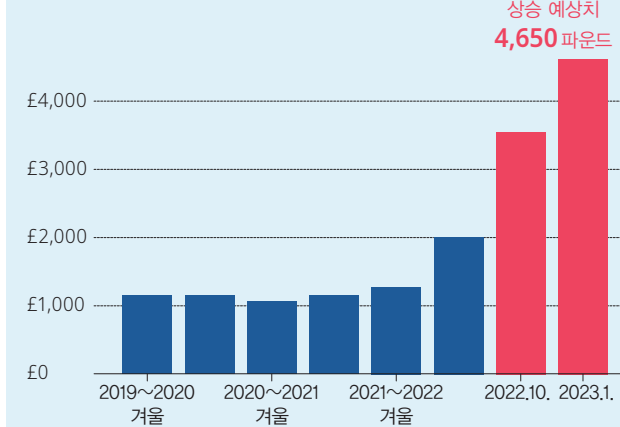


지난 9월 14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 의회 본회의장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지원, 에너지 위기 등을 주제로 2022년 국정연설을 했다.

자유무역을 저해하고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는 다양한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 등을 발표하며 EU 국가들의 협력과 동맹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나 EU 국가들도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분오열하고 있어서 향후 EU 집행위원장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제13대 EU 집행위원장

EU 주요국 에너지 요금 추이



프랑스와 독일의 전력요금 상승 현황



자료: BBC & Bloomberg

대비 50배 정도 올랐다가 지금은 MMBtu(25만kcal 열량을 내는 가스양)당 50달러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천연가스 원가상승은 결국 전기요금과 난방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이미 독일, 프랑스 등은 10배 이상의 에너지 요금 인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올겨울은 얼어죽지 않기 위해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EU는 러시아 PNG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기 위해 'REPowerEU'라는 제안을 내놓았다. 러시아산 PNG의 3분의 2 정도를 대체하기 위한 계획으로 LNG 대량 수입, 재생에너지 확대 등 다양한 계획이 담겨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실행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아니어서 현재 LNG 대량 구매 등을 통해 올겨울 에너지 재고 비율을 90%까지 채워 겨울을 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부족해 'Save gas for a safe winter' 계획안을 통해 EU 국가들은 천연가스 소비량을 15% 감축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나라마다 상황이 달라서 15% 감축을 지키겠다는 국가와 그렇게 못하겠다는 국가로 나뉘어 EU가 사분오열하고 있다. 천연가스 위기로 철강공장 등이 문을 닫는 등 EU의 경제침체가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은 약 -2.8%까지 경기하강을 보일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측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탈리아, 헝가리, 체코 등에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패로 인해 친러시아 성향의 극우정당들이 점점 세력을 키우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 저소비-고효율 구조 전환 필요

EU의 에너지 위기는 EU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치게 된다. EU가 평상시에 구매하지 않던 LNG를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이다. 이미 동절기 재고의 90%를 LNG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채운 상태이며, 향후에도 상당량의 LNG를 구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LNG 대량 수입국인 우리 입장에서 물량경쟁을 넘어선 물량전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가격인상은 어쩔 도리가 없는 실정이다.

탄소중립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강화로 천연가스까지도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지속적인 수급불안과 고가의 천연가스 시장은 당분간 판매자 우위를 보일 것이다. 이미 판매자들은 말도 안 되는 고가의 계약을 구매자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자 기존 장기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수년간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세계 각국은 에너지 요금 인상, 에너지 소비 절약과 재정투입 등 다각적 대책을 강구하는 상황이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세계 속 한글과 한국어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언어학 대학이 1990년대 중반에 합리성, 과학성,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30개 문자에 대한 순위를 매겼는데, 1위를 차지한 문자가 바로 한글이다. 그룹 BTS 등 K팝 한류에 이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적 열풍이 확산되면서 한글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더욱 뜨거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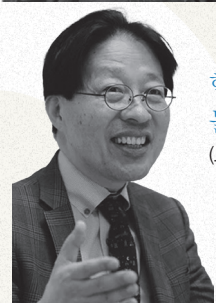


한글의 가치에 주목한 세계의 언어학자들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다.
(베르너 사세(Werner Sasse), 독일 함부르크대 교수 역임)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알파벳을 발명했다.
(프라이드 포스(F. Vos), 네덜란드 라이덴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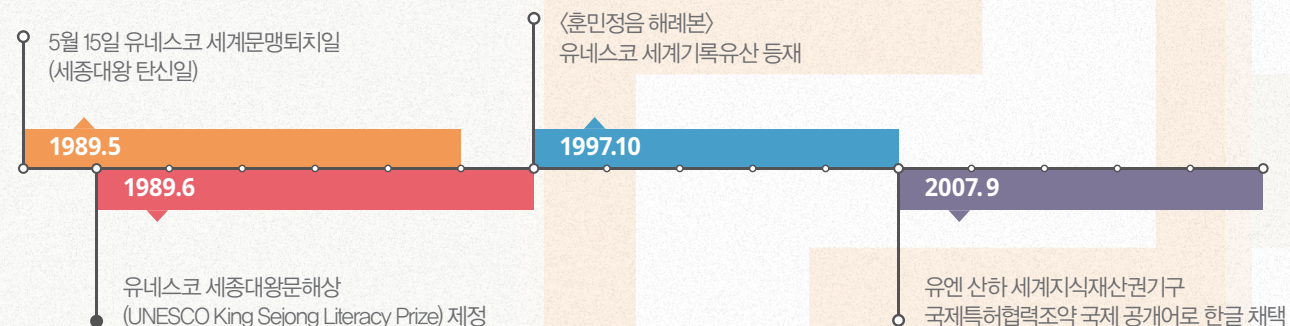
한글의 구조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음이 문자가 되는 놀라운 시스템을 발견하게 된다.
(노마 히데키, 일본 국제교양대학교 교수)



한글은 세계에서 쓰이고 있는 어떤 문자보다도 가장 과학적인 체계를 갖춘 문자다.
(에드윈 라이샤워(E.O. Reischauer),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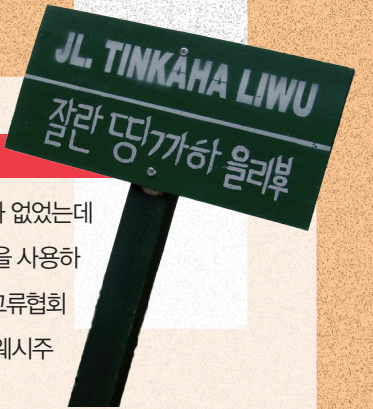
세계 속 한글의 위상

유네스코에서는 1989년에 세종대왕문해상(UNESCO King Sejong Literacy Prize)을 제정해 해마다 인류의 문맹률을 낮추는 데 공적을 세운 단체나 개인을 선정해 상을 주고 있다. 1997년 10월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으며 2007년 9월에는 세계 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만장일치로 한국어를 국제특허협력조약 국제 공개어로 채택했다.



인도네시아 짜야짜아족이 채택한 공식 표기문자, 한글

짜야짜아족은 인도네시아 소수민족으로 전체 인구가 약 7만 명이다. 오래전부터 고유 언어는 있었지만 문자가 없었는데 2009년 한글을 공식 표기문자로 채택해 현재까지 사용 중이다. 현지 도로 표지판이나 마을 간판 등에도 한글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짜야짜아족 거주지역 8개 초·중·고등학교에서 한글 수업을 진행 중이다. (사)한국짜야짜아문화교류협회는 지금까지 한글을 배운 짜야짜아족 주민이 5,000여 명 될 것으로 추산한다. 지난 8월 25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주 바우바우시에 한글 전문학교인 짜야짜아한글학교가 문을 열었다.



한글 사용하는 글로벌 브랜드

몇 해 전부터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서 한글 활용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2015년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 카를 라가펠트가 '한국', '서울', '코코' 같은 한글을 의류에 새겨 넣으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이후로 최근까지도 한글을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는 브랜드가 늘어나고 있다.

한글을 디자인 및 마케팅 요소로 활용한 해외 사례



2015
프랑스 샤넬 수석 디자이너 카를 라가펠트 '2015/16 크루즈 컬렉션' 패션쇼



2018
미국 랄프로렌 '평창' 한글 티셔츠 출시



2019
인도네시아 한글 포장지 라면 출시



2021
나이키 '뎅크 로우 사우스 코리아'



2021
스웨덴 아동복 브랜드 '미니로디니(Mini Rodini)'

국제언어로 부상한 한국어

한국어는 이제 '국제 언어'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7,700만여 명으로 전 세계 언어 중 모어 사용자 수에 따른 한국어의 순위는 14위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학·한국학 전공 강좌 개설 대학은 107개국 1,395개 대학에 이른다.



전 세계 세종학당 현황

세종학당은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근거해 운영하는 한국어·한국문화 교육기관이다. 외국에서 한글을 배울 수 있는 세종학당이 2007년 3개국 13곳으로 시작해 2021년 기준 84개국 234개소로 확대됐다.

세종학당(2021년 기준)
84개국 234개



FTA 활용으로 점착 솔루션 글로벌 1등 기업으로 도약할 것

(주)에선테크

2005년 창립한 (주)에선테크는 ‘점착소재부품’ 전문기업이다. 디스플레이, 자동차, 2차 전지 등에서 상위 기술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주)에선테크는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선제 개발, 제안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환영받고 있다.

글 이선민 기자 사진 박충렬

점착소재부품이란 점착 재료를 기반으로 하여 제품의 용도에 맞게 제작된 부품이다. 상변화를 수반하는 것이 점착제라면 스키타이프, 양면테이프, 점착시트 등 쉽게 붙이고 뗄 수 있는 점탄성을 보유한 물질을 점착제라고 한다. 어떤 제품을 만들든 점착소재부품은 반드시 필요하다.

(주)에선테크가 생산 중인 점착부품은 모든 제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 소재로 LCD TV/MNT, OLED TV, 자동차, 에너지 시장 등에 공급 중이다. 창업 초기 모토롤러 회사와 기술개발을 하며 실력을 인정받고 창업하던 해에 100만 달러 매출을 달성했다. 그러나 휴대폰 시장보다 디스플레이 분야 점착부품 연구에 매진한 결과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1위의 자리에 올랐다. “한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는 기술 표준이 없어 새로운 부품 사양을 결정하는데 시간과 자원을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우리는 진출 시장에서 다양한 개발 경험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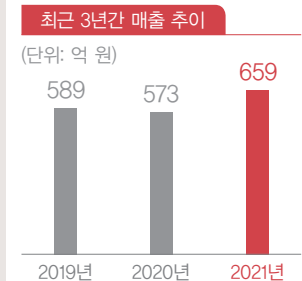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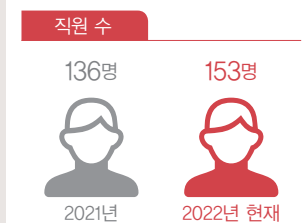
HISTORY

(주)에선테크 역사

- 2005 (주)에선테크 창립, 월 매출 100만 달러 돌파
- 2008 중국 광저우 법인 설립, 표시장치용 개스킷 패드 특허등록
- 2012 중국 쑤저우 법인 설립
- 2013 무역의날 표창, 2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 2015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공인 획득
- 2017 베트남 하이퐁 법인 설립, 중국 심천 사무소 개소
- 2019 인도네시아 찌카랑 법인 설립, 한국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지원사업, 수출기업이라면 필수!

(주)에선테크는 중국 수출 시 통관 지연이 자주 발생했는데 AEO 공인을 획득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을 획득하면 대내외적 화물관리 안전성 확보, 물품 검사비용 축소, 서류 제출 생략, 신속통관, 미국·중국 등 AEO 시행 국가 간 검사생략 등 다양한 관세행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에선테크는 통관 절차 상에서 수출경쟁력이 확보되면서 수출이 증가했다. (주)에선테크는 현재 AEO 공인 AA 등급이다.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의 이런 고민을 미리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착 소재를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춘섭 대표는 17년간 (주)에선테크를 든든하게 버티게 해준 대표제품으로 TV 디스플레이의 4면 모서리에 부착되는 개스킷 패드(gasket pad)를 꼽았다. 개스킷 패드는 진동이나 충격으로부터 장치나 소자 등을 보호하고, 이물이나 수분의 침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주)에선테크의 개스킷 패드는 오랜 기간 물성의 변화 없이 점착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고급제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주)에선테크의 점착부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 획득 후 정부 지원 활용

(주)에선테크는 2008년 중국 광저우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2012년 중국 쑤저우 법인, 2017년 5월에 베트남 법인, 2019년에 인도네시아 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법인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중이다.

“저희가 회사를 설립하던 2000년대 초기는 글로벌 기업이 아시아로 생산공장을 옮기던

때였습니다. 한국의 공장 역시 같은 수순을 밟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창업 3년 만에 해외법인을 설립하기 시작했는데 인건비 절감보다는 현지 고객에게 우리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죠.”

전 대표는 사업 초기에는 직접 해외영업을 하면서도 정부 지원을 받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중국 수출 시 통관을 지연시키는 일이 자주 있었을 때 안양세관의 도움으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 획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며 정부의 지원을 적극 활용했다. OK FTA 컨설팅, FTA 활용 전문 컨설팅, 방문 FTA 컨설팅 등 경기 FTA활용지원센터의 FTA 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한·중 FTA, 한·베트남, 한·EU,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획득하며 수출을 확대했다. 또한 미국 수출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쟁점이 발생했을 때도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쟁점을 해소했다. 앞으로도 FTA를 활용한 수출입을 선도함으로써 점착 솔루션 분야의 1등 기업이 되겠다는 (주)에선테크의 활약이 기대된다. [한경]



(주)에선테크의 고기능성 점착소재는 뛰어난 점착 능력뿐 아니라 방열, 차광, 전자파 차폐, 충격 흡수 등에서도 탁월한 기능을 자랑한다.

금본위제와 기축통화 영국 파운드의 등장

금본위제는 경제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금본위제란 금을 국제거래의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거래 방식이 지금의 경제생활과는 맞지 않지만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환율분쟁으로 확대되면서 금본위제에 대한 향수가 깊어졌다. 역사적으로 금본위제의 탄생 배경과 의미를 짚어본다.

글 김동욱 한국경제신문 중기과학부 부장



오직 금만이 영원히 반짝인다. 아득히 먼 과거부터 금이 지닌 불변의 반짝임은 사람들을 매혹했다. 사람들이 금의 가치를 믿는 한, 금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의미는 흔들리지 않고 유지됐다. 다만, 금은 그 희소성 탓에 '화폐'의 주역 자리에선 한발 물러나 있는 기간이 길었다. 고대 오리엔트 세계에선 오랫동안 은이 주요 가치척도 및 교환수단으로 기능했다. 아나톨리아 고원 주요 광산에서 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양의 은이 산출됐고 국제교역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돼서다.

19세기 금본위제 정착

시대가 흐르면서 금이 점점 전면으로 등장했다. 전근대 시기의 은을 기준으로 삼던 문명권은 19세기 들어서면서 급변했다. 결정적 계기는 1859년 미국 네바다에서 대규모 은광이 발견되면서 은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1871년 은본위제를 고수하던 독일이 금본위제로 이행하면서 금대세론은 굳어졌다. 때마침 독일은 보불전쟁의 승리로 프랑스로부터 50억 프랑의 배상금을 받아 금본위제 전환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다.



기축통화

세상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는, 모든 거래의 중심이 되는 통화. 제1·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영국 돈, 파운드가 기축통화 역할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앞두고 1944년 미국의 브레튼우즈에서 개최된 회담을 계기로 기축통화는 달러로 전환된다.

1850년을 전후해 미국 캘리포니아와 호주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금 가격이 하락했다. 새로운 금광 발견으로 25년간 생산된 금의 양이 이전 250년간 생산된 금의 양과 맞먹을 정도가 됐다. 대형 금광 발견으로 미국과 프랑스, 벨기에 등에서 통용되던 금은양본위제가 쫓겨났다.

이에 따라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등 소위 프랑권 국가들이 1870년대 금본위제로 이행했고 미국도 1900년에 금본위제를 채택했다. 1900년이 되면 유럽과 북미, 일본, 아르헨티나까지 주요국이 금에 기반을 둔 화폐체제를 구축했다. '고전적 금본위제(the classical gold standard)'가 자리 잡은 것이다.

금본위제 이후 세계화 확산, 인플레이 위험 약화

이때에는 지폐를 통화당국에 들고 가면 언제라도 법이 정한 무게의 순금으로 바꿀 수 있었다. 1914년 이전 영국에선 1파운드당 순금 113.0016그레인(gr)으로 교환됐고, 미국에선 1달러당 순금 23.22그레인의 비율로 태환(convert)됐다. 금 태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영국은 1844년 '은행허가법'을 제정하고 영국 중앙은행(Bank of England)의 은행권 발행 규모를 자신들의 금 보유고에 1,400만 파운드를 더한 금액까지만 허용했다.

◀ 골드러시, 캘리포니아. 1849년, 큐리에 의한 석판화

독일도 1876년 관련법을 통해 독일제국은행(Reichsbank)이 발행하는 지폐량은 제국은행 금보유고 및 재무성 증권보유고의 세 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금에 기반을 둔 안정된 통화체제가 갖춰지면서 세계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인플레이션 위험이 약해졌다. 금본위제 아래 통화정책은 금의 화폐가치를 유지한다는 준칙에 따라 이뤄졌고, 이 준칙이 잘 지켜지면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이후에 비해 훨씬 적었던 것이다.

금본위제 이행을 이끈 영국의 힘

19세기 후반 금과 은 모두 생산이 늘었지만 두 금속의 위상이 극과 극으로 달라진 금본위제로의 이행 배경에는 영국의 힘이 있었다. 금의 가치가 지고 지선(至高至善)해서가 아니라 최강국 영국이 금본위제를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원래 중세부터 나폴레옹 전쟁 때까지 영국은 은본위제 국가였다. 하지만 나폴레옹 전쟁을 거치면서 영국 중앙은행이 전비 조달에 전력하는 과정에서 은본위제가 폐지되고 1816년 금본위제가 선택됐다. 영국이 금본위제를 실시하자 1870년대 영국의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많은 나라가 금본위제로 이행을 서둘렀다. 또 이들과 교역을 하던 많은 나라도 불이익을 줄이려고 금본위제를 택했다. 당시 최대 교역국으로 주요 운송국이며 해외자본 수출국이던 영국의 화폐가 사실상 국제 지불수단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던 점이 배경이다. 하지만 영국을 중심으로 한 금본위제는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흔들리면서 기축통화 자리가 파운드에서 '달러'로 넘어가게 된다. 금본위제의 등장과 정착의 역사를 살펴보면 금에 대한 인류의 애착 이면에는 냉정한 현실정치의 역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치권력이 안정될 때에만 금도 제값을 받을 수 있었다. ■

물류 전용 수출 바우처로 물류비 부담을 줄여드려요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수출 성장세 둔화가 우려됨에 따라 코트라가 하반기부터 수출기업의 물류와 인증, 해외 마케팅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수출더하기' 비상계획을 가동 중이다. 먼저, 수출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물류비 부담 해소를 위해 물류 전용 수출 바우처 지원을 늘렸다. 수출 물류비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물류 전용 수출 바우처를 신청하면 도움이 된다.

#1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물류비용의 70% 또는 50% 지원

높은 해상·항공 운임에 대응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제 운송비를 지원한다. 수출 애로 완화 및 해소를 목적으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국제 운송 및 물류비 지원을 위한 물류 전용 수출 바우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기간은 2022년 9월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2022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물류비용의 70% 또는 50%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은 최대 1,400만 원, 중견기업은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보조금 지급은 '수출 바우처'와 같이 '운영기관과의 전자협약 체결', '바우처 발급', '정산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한다.

#2

#지원 대상
#지원신청 제외 대상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이다. 지원신청 제외 대상은 휴업이나 폐업을 한 기업,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불량거래처로 등재되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기업 등이다. 그 외에도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또는 2022년 산업부 및 중기부의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돼 아직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등이 신청지원 제외 대상이다.

#3

#C조건과 D조건에 해당하는 국제운송비
#운임 #보험료

지원 내용은 수출자가 부담하는 인코텀즈 C 및 D 조건에 해당하는 국제운송비다. 국제운송비에는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되는데 운임에는 한국에서 해외로 보낼 때 해상과 항공 운송료, 국제복합운송, 국제특송이 해당한다. 국제복합운송의 경우 최종 목적지 도착을 위해 창고 보관 없이 바로 진행되는 국가 간 내륙운송에 한한다. 국제특송의 서비스 특성상 정산 불가 항목인 국내운임 및 도착국 현지 물류비용을 분리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비용의 70%를 운임으로 인정한다.

※C조건(CFR·CIF·CPT·CIP),
D조건(DAP·DPU·DDP)

#4

#러·우 사태 관련 정산항목 확대

추가지원 범위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에서 한국으로 반송하는 국제 운송비, 대체목적지로 우회하는 국제운송비나 국제복합운송비 등이다. 최종목적국 또는 경유지가 이 세 나라인 화물의 현지 발생 지체료도 지원범위에 포함된다.

#5

#신청방법 #온라인 상시신청 #문의처

물류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상시 온라인(www.exportvoucher.com/shipping)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신청→서류심사 및 선정→전자협약체결 및 바우처 발급→정산 신청→정산금 지급 순서로 진행된다. 물류비 세부 내역서 및 신청서류를 구비해 사업을 신청하면 지원요건 부합 여부,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심사한다. 참여기업이 물류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운영기관과 협약체결 및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를 발급받고, 전자협약체결 완료 기업은 신청 당시 제출한 물류비 세부내역의 지출 증빙서류를 구비해 정산을 요청한다. 이후 운영기관이 정산 검수 후 정산금을 지급하는 순서다. 문의는 1533-4323으로 유선 문의 또는 홈페이지 내 문의처 '온라인 문의'를 이용하면 된다.

#6

#유의사항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건은 신청 불가하다. 중복수급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및 환수액 대비 최대 5배의 제재부과금 부과, 사업참여 제한 등으로 제재할 예정이다. 물류비 세부신청 내역서는 신청일 기준 집행이 완료된 물류비 내역만 작성해야 하며, 정산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서류 제출 불가 시 서비스 실제 진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산 불가하다. 사업 신청 시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결격요건 사항 등이 있을 경우 별도 보완 요청 없이 자동탈락 처리된다. ^{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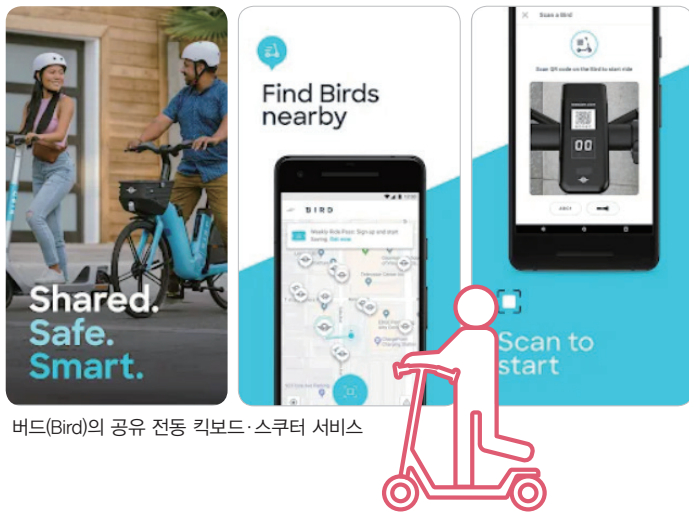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

최근 가파르게 오른 유가로 인해 소형 이동수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적인 단거리 이동이다. 환경친화적 이동수단이라는 점도 관심받는 이유다. 미국 정부는 퇴근시간 차량 중 10%를 마이크로 모빌리티로 대체할 경우 도시당 평균 4,800대의 차량이 사라질 것으로 추산했다.

글 유효상 차의과대 경영대학원장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25km/h 미만의 속도를 내고 네 연기관을 장착하지 않은 소형 및 경량 이동수단을 통칭한다.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전동 스쿠터, 전동 스케이트보드가 대표적이다. 5년 전에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시장에 처음 선을 보였다. 얼리 어답터는 전동 킥보드를 빠르고 재미있고 효율적인 이동수단으로 생각했다. 오포(Ofo), 모바이크(Mobike) 등 중국 공유 자전거 플랫폼으로 시작된 ‘퍼스트-라스트 마일’ 모빌리티에 대한 열풍은 미국 시장에 상륙해 버드, 라임과 같은 공유 전동 스쿠터 기업을 탄생시키며 마이크로 모빌리티 전성시대를 열었다. 여기서 퍼스트 마일이란 집을 나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정류장까지 이동하는 거리를 의미하며, 라스트 마일이란 대중교통에서 하차한 후 다음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거리를 의미한다. 아무리 교통인프라가 좋아도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자동차와 최종 목적지 사이에는 별도의 이동수단이 필요할 때가 많다. 벤처캐피털은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 모빌리티 스타트업에 5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다. 특히 2017년 설립한 미국 스타트업 버드(Bird)는 불과 몇 개월 만에 유니콘(기업



버드(Bird)의 공유 전동 킥보드·스쿠터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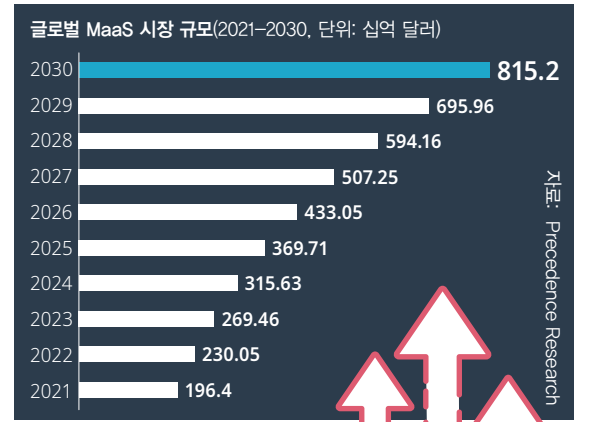
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으로 등극해 미국과 유럽, 중동 등 전 세계 350여 개 도시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스쿠터 서비스를 하고 있다. 올해 초 싱가포르의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기업인 빔모빌리티(Beam Mobility)가 9,300만 달러(약 1,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이동 제한 등 각종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마이크로 모빌리티 수요는 늘어나는 추세다. 팬데믹 이후 친환경 이동수단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빔모빌리티의 매출은 15배 이상 증가했다. 빔모빌리티는 이번 투자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터키, 필리핀 등 새로운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서비스형 모빌리티(MaaS; Mobility as a Service)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뽀(Whim).

서비스형 모빌리티 (MaaS; Mobility as a Service)

사람들은 매 순간 개인별로 복잡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생산해낸다. 최근 이러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개인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도 생겨나고 있다.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모빌리티 수단들을 하나로 묶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서비스형 모빌리티(MaaS; Mobility as a Service)의 비즈니스모델이 탄생한 것이다. MaaS란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자동차·라이드 셰어링(sharing)/헤일링(haling), 카셰어링, 렌터카, 택시, 자전거, 전동 스쿠터, 철도, 비행기, 주차장, 숙박에 이르기까지 끊김 없이(seamless)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멀티모달 플랫폼(Multimodal Platform for traffic/mobility)’ 서비스를 뜻한다. MaaS의 대표적인 사례로 핀란드 마스 글로벌의 뽀(Whim)을 꼽을 수 있다. 뽀는 목적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목적지까지 경로와 교통수단, 그리고 요금을 표시해준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결제와 동시에 이용이 가능하다. 요금제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택시, 렌터카, 카셰어링, 렌터 바이크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MaaS 시장은 유동성 위기 속에도 업체 간 합종연횡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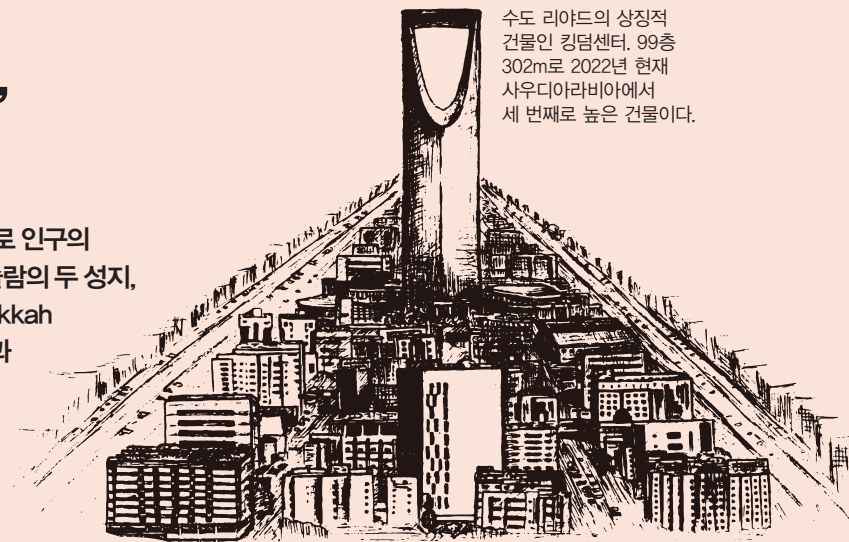
활발한 합종연횡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등장 기대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스타트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의 버드는 지난해 23억 달러의 기업가치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으나 현재 시가총액은 약 1억3,500만 달러로 거의 20분의 1로 하락하면서 마이크로 모빌리티 최고기업의 체면을 구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사기업 리서치&마켓의 보고서는 미국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이 2029년에 154억 달러(약 2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인사이트 파트너스는 글로벌 MaaS 시장이 2025년까지 연간 33.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시장이 어두운 것과 달리 향후 전망을 밝게 본 이유는 유동성 위기 속에서 마이크로 모빌리티 기업들 간 합종연횡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플랫폼 기업의 성장은 지속적인 확장을 통한 네트워크 효과를 확실하게 누릴 만한 자금 확보가 관건이다. 각국의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은 현재 매우 초기 단계에 있으며 그 진화나 성장은 투자규모, 정부의 규제 수준이나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매우 달라질 것이다. ^{한경}

이슬람과 아랍 세계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서아시아(중동)의 아라비아반도에 위치한 왕국으로 인구의 대부분이 아랍어를 사용하고 이슬람교를 믿는다. 국왕의 호칭이 이슬람의 두 성지, '메카와 메디나의 수호자(The Custodian of Two Holy Mosque, Makkah and Medinah)'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과 아랍 세계에서 지도력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나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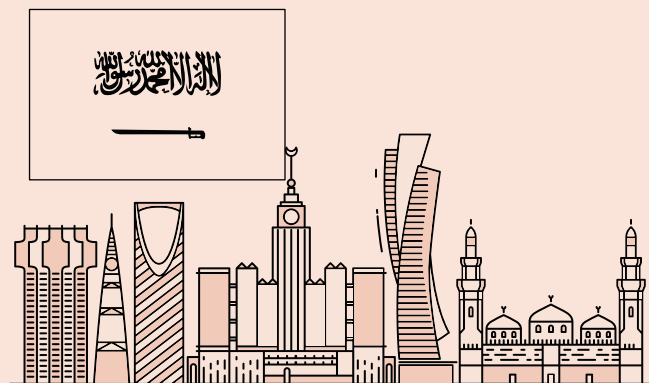
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책임연구원



수도 리야드의 상징적 건물인 킹덤센터. 99층 302m로 2022년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건물이다.

코로나19 리스크 감소 추세, 2022년 플러스 성장세 예상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의 2021년 국내총생산(GDP)은 약 8,330억 달러, 1인당 GDP는 2만3,310달러다. 2021년 1분기 성장세가 플러스로 돌아서 꾸준히 산업구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1년 2분기부터 석유 분야의 약 3% 회복세와 더불어 비석유 분야가 약 6.5% 성장세를 보이면서 GDP 또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됐다. 2021년 3분기 국제유가가 75달러 선까지 회복됨에 따라 석유 분야는 16%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비석유 분야는 감소율을 보였으나 2021년 1분기와 비교하면 1.7%가량 증가해 사우디 내 코로나 리스크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8월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가 석유 수입 급증에 힘입어 올해 7.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예상치였던 4.8%보다 2.8%p나 높은 수치다. 기존 국가 주도 프로젝트 대부분이 코로나19 리스크가 큰 제조, 건설, 플랜트 등이었으나 사우디 내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서 점진적으로 공사가 재개돼 추가적인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특히 국제유가가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중국 등 대형 시장에서 비석유 분야의 국제수요 반등으로 인해 2021년 대비 2022년 플러스 성장세를 예측하는 전망이 늘어나고 있다.



SAUDI ARABIA

경제성장률 **7.6%**
(IMF 발표, 2022년 8월 기준)



왕위 계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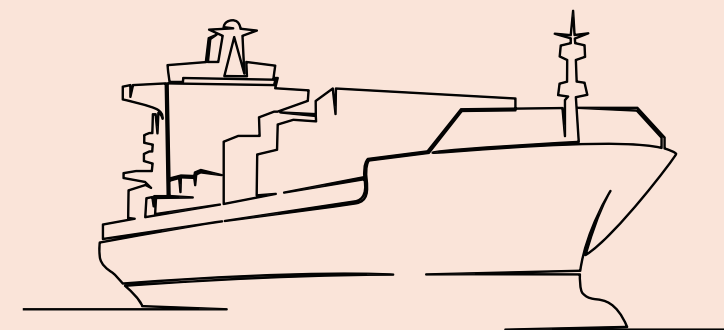
무함마드 빈 살만(MbS)

교역 규모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1년 한국·사우디 전체 교역액은 273억5,1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54%가량 증가했다. 사우디로의 수출액은 총 33억2,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240억2,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양국 간 교역액은 전년과 달리 2021년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이 점차 누그러지고 회복세를 보이면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이 몰아친 2020년 유가 하락과 경기침체가 동반하면서 산업 전반의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전 세계 구매력도 감소했다. 그 결과, 2021년 1~2월 수출 및 수입 또한 전년 대비 감소세가 지속됐다. 2021년 2월 이후부터 코로나 백신 개발 및 워드 코로나 정책 기조가 국제유가 회복세로 이어져 교역량 상승세를 보였다. 2021년 9월까지의 교역액만으로 전년 교역액의 93.6%를 회복한 점이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준다.

한국은 '사우디 비전 2030' 중점 협력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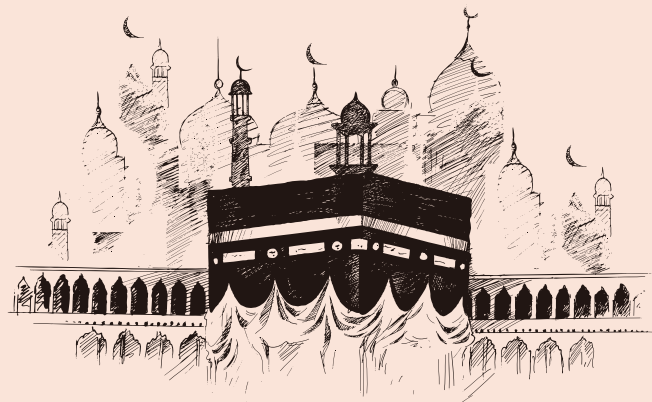
2016년 무함마드 빈 살만(MbS) 왕세자는 중장기 국가경제 개조 계획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석유에 편중된 국가경제구조의 산업다각화였다. 지난 9월 총리로 임명된 그는 특히 '사우디 비전 2030' 프로젝트 결정권자로서 국영기업 아람코(ARAMCO)와 사빅(SABIC) 등을 통한 민간투자 계획뿐만 아니라 관광, 엔터테인먼트 등 비석유 분야 개발 계획 등을 주도하고 있다. 빈 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사우디 국부펀드(PIF)는 올 초 '3N'이라 불리는 한국 3대 게임사 가운데 엔씨소프트와 넥슨에 총 3조5,000억 원을 투자해 각각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지난 5년간(2017~2021년) 사우디의 대(對)한국 직접투자액(약 3조 원)을 웃도는 금액을 쏟아부었다.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인도와 함께 '사우디 비전 2030' 5대 중점 협력국으로 에너지 및 제조업, 정보통신기술(ICT), 인력양성, 보건의료, 중소기업 교역 및 투자확대 등 5개 분야 30여 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한·사우디 교역액
273억5,100만 달러
(2021년 기준)

입국 및 방역조치 대폭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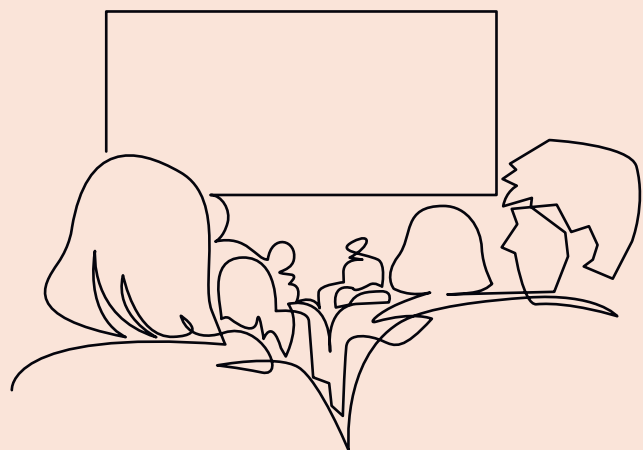
사우디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총 81만6,000명 수준이다. 최근 하루 확진자 수는 평균 100명 이하로 낮아졌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전체 인구 중 72.6%로 2,530만 명이 접종을 완료했다. 사우디는 올해 코로나19 방역규제를 대폭 완화해 성지순례(하지) 참가인원을 100만 명까지 늘렸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2020년 1,000명, 2021년 6만 명으로 제한했던 성지순례객 수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사우디 내무부는 코로나19 관련 입국 및 방역조치를 대폭 완화했다. 내무부는 야외는 물론 실내 공간 내 모든 활동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폐지하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했다. 사우디 입국 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과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이 필요 없다. 다만, 방문 비자 소지자는 입국 시 사우디 체류기간 중 코로나19 확진 시 발생할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자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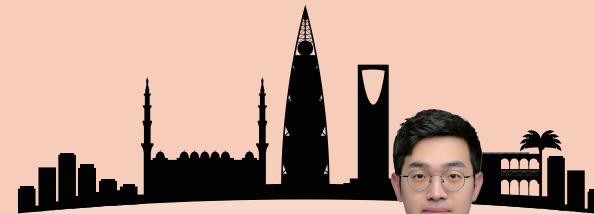
성지순례 인원 (2022년) 100만 명으로 확대

영화 '와즈다'가 일으킨 사회적 변혁

엄격한 이슬람을 표방한 사우디는 이슬람법 '샤리아'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문화에 대해 철저히 금지했기 때문에 영화, 공연, 춤, 노래 문화는 활성화돼 있지 않다. 2012년 최초로 사우디에서 장편 영화 <와즈다(Wadjda)>가 제작됐고, 제69회 베니스국제영화제 3개 부문 수상을 하면서 국제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다. 자국 내에서 상영되지 못했음에도 여성의 자전거 탑승이 허용되는 등 사회적 변혁을 불러왔다. 빈 살만 왕세자의 '사우디 비전 2030' 개혁안 발표 이후 정부는 상업영화 금지령을 폐지하고, 2030년까지 총 350개의 영화관 건립을 허가했다. 수도 리야드에서는 미국 영화 체인점인 AMC 극장이 운영을 시작하면서 이전까지 금지됐던 할리우드 영화가 상영됐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부문 육성 개혁안에 따라 공연부문도 개선돼 2019년에는 방탄소년단(BTS) 콘서트를 개최했다. 최근 사우디는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해 남성 후견인제도 완화, 운전 허용, 육아 지원제도 도입 등 사회활동 제약 요인을 일소했다.



2030년까지 영화관 총 350개 건립



현지 인터뷰

김태민 코트라 리야드무역관 과장

Q 사우디 진출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현지 관행이나 주의사항을 말씀해주세요.

A 사우디는 왕세자가 2016년 발표한 '사우디 비전(Saudi Vision) 2030'에 따라 전방위적 국가 개혁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정책이 '사우디제이션(Saudization)'으로 제품, 서비스, 노동력의 자국화다. 자국 제품·서비스 이용 장려는 현지화청(LCGPA)에서 총괄하며 자국민 고용률 제고는 인력사회개발부(HRSD)에서 총괄한다. HRSD는 니타카트(Nitaqat)라 불리는 자국민 의무고용 제도를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일정 비율 이상 사우디인 고용을 의무화한다. 업종별·기업 규모별로 비율은 다르지만 최소 20% 이상의 사우디인을 채용해야 한다. 이는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예상비용인 만큼 현지 진출에 앞서 철저한 경제성 평가와 시장조사가 필요하다.

Q 사우디에서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제품이나 진출 유망 산업군을 소개해주세요.

A 세계 최대의 산유국인 사우디는 국가경제 대부분을 석유산업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제조업 기반이 상당히 약한 상황이다. 전통적 산유국 역할을 넘어 제조업 등 신산업 분야로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국 내 제조업 기반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대부분의 기자재, 부품, 공산품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국산 차량 및 자동차 부품과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 2021년 기준 현대자동차의 현지 시장 점유율은 16.6%로 일본의 도요타에 이어 2위다. 화장품의 경우, 최근 K팝과 한국 드라마 열풍을 타고 관심을 끌고 있으나 소비층이 다소 젊은 층에 국한돼 있고 기존 진출한 글로벌 브랜드와 경쟁 시 진입장벽이 존재해 고전이 예상된다.



비즈니스 에티켓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변수가 많은 사우디 타임,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라

사우디 바이어들은 약속을 해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흔하다. 약속을 확정된 후, 정기적인 확인으로 리마인드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좋다. 이슬람 종주국으로 교리에 따른 삶의 방식을 상당히 중요시하므로 기도시간은 피해서 약속시간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대면 협상·설득 선호

대면 협상과 설득에 익숙해 기업 간 비즈니스 진행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대면 만남을 통해 인사하고 보다 발전시키는 것을 선호한다. 이때, 바이어들에게 간단한 선물을 준비하거나 이슬람어로 인사를 준비해 간다면 상당히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으며 상담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비즈니스는 천천히, 지속적으로

사우디는 관료적 문화가 강해 의사 결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연락을 재촉하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반 거래 진행 시에는 바이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살라, '지켜보자, 고민해보겠다'

비즈니스 초기 단계에서 바이어가 '인살라'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이때 '인살라'는 '지켜보자, 고민해보겠다'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문화를 존중하되 기업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 바이어 측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



수출기업을 위한 한·아세안 FTA 살펴보기

아세안(ASEAN) 국가는 우리나라와 교역하는 규모도 크고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한 지역이다. 2022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돼 서로 간에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번 호에서는 한·아세안 FTA를 살펴보고 우리 기업들이 유리한 FTA를 비교 선택, 수출확대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글 임은주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팀장

1

한·아세안 FTA 경과

한·아세안 FTA는 2005년 2월 협상 개시 후 2006년 8월 상품협정 서명을 거쳐 2007년 6월 상품협정이 발효됐고, 2009년 5월 서비스협정 발효, 2009년 9월 투자협정이 발효됐다. 한·아세안 FTA 발효 당시 협정문 부속서 3. 원산지 규정은 HS2002 기준으로 규정됐으나 부속서 3 부록1. 원산지증명 운영절차(2014.1.1) 개정을 비롯해 부록2.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HS2012 기준으로 개정, 부록3.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HS2017 기준으로 개정했다.

한·아세안 FTA는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발효한 FTA이며,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라는

아세안 회원국(10개국)



의의를 갖는다. 한·아세안 FTA 회원국은 우리나라와 제2의 교역 파트너이자 제3위 투자대상지역으로 2007년 6월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아세안과의 교역은 2.9배(수출 3.4배, 수입 2.3배), 對아세안 투자는 약 2.2배 이상 확대됐다.

우리나라와 아세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맞아 한·아세안 FTA의 개선을 위해 한·아세안 FTA와 RCEP의 양허비교, 추가자유화 모델 도출, 협정 개선방향 등에 대해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27일 제19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를 개최해 디지털 등 최신 통상 이슈를 반영한 한·아세안 FTA 개선방향을 논

ASEAN

FTA 발효국 동향과 활용

의했으며,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논의를 위한 관세·원산지소위원회 개최를 협의했다.

2

한·아세안 FTA의 주요내용

원산지 규정 부가가치 계산방법은 공제법과 집적법 중 국가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품목별 부가가치 기준은 역내부가가치 35~60%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FOB(Free On Board)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HS 6단위 기준으로 100개 품목에 대해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이 허용되며 역외부가가치 40% 이하, 역내산 재료비 60% 이상 돼야 한다. 누적기준은 공정누적을 불인정하며 재료누적은 가능하지만 다국누적(일부 예외 존재)을 채택하고 있다. 최소허용기준에 있어 가격기준이 적용되는 일반품목과 농수산물물은 FOB 10% 이하여야 하며, 섬유제품은 중량 기준 10% 이하일 때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세트물품은 원산지 상품 판정 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각각에 대해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 기관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이며, 우리나라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는 세관과 상공회의소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통일서식인 AK서식에 작성돼야 하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 작성돼야 하며, 수출 당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는 수출물품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돼야 한다.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한 예외적인 경우, '소급 발급(ISSUED RETROACTIVELY)'이라는 문구를 기재해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 발급할 수 있다.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영역 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된다. 다만 제3국을 경유하더라도 지리적 운송상 이유로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고 하역, 재선적, 상품 보존에 필요한 공정 외에 어떤 공정도 거치지 않아야 하고 통과선하증권 구비 등이 필요하다.

원산지 검증 한·아세안 FTA는 간접검증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직접검증을 인정한다. 수입국 관세당국이 검증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국에 검증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간접검증 주체는 세관이며, 원산지 검증 결과에 대한 회신기간은 2개월이다.

우리나라와 주요 교역국의 교역규모

(단위: 억 달러, 2021년 기준)

중국 3,015
아세안 1,765
미국 1,691

3

수출기업의 한·아세안 FTA 활용 유의사항

아세안 회원국은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적용 시 심사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해외통관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에 근거해서 기재사항 누락 등 오류 없이 발급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검증 절차의 목적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로부터 3년 이상 신청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당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이었던 하더라도 원산지 검증을 위해 관세당국으로부터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한·아세안 FTA 협정문 등 참고자료 조회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홈페이지 (www.fta.go.kr)
- 관세청 FTA포털 홈페이지 (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수소경제 시대, 수소산업 가치사슬 이해하기

미래의 청정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의 세계시장 규모는 2050년 1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의 생산에서 저장-운송-충전-활용에 이르는 수소산업 밸류체인(가치사슬) 전반에 대해 살펴보자.

자료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

환경친화적 차세대 에너지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세계 주요국들은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을 산업화(1850~1900년) 이전 대비 2℃ 아래로 억제하고 가능하면 1.5℃까지 낮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195개 당사국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여됐으며,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7% 감축 의무가 부여됐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석유·석탄 등)를 대체해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등)를 이용한 전력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소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 등을 보완하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소경제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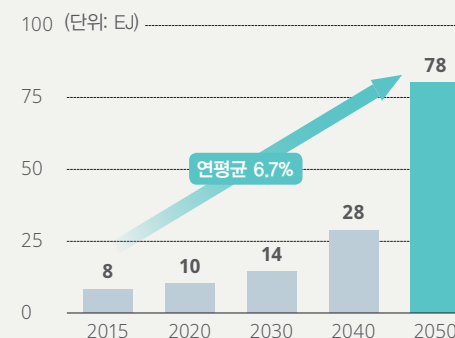
①에너지 자립 및 에너지 안보 강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화석연료를 수소로 대체 시 국내 생산이 가능하며, 에너지원의 다각화로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낮춰 에너지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된다.

②친환경에너지로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 수소는 산소와 반응해 열과 전기를 만든 후 부산물로 물(H₂O)만 배출되는 친환경에너지다. 태양광·풍력과 같이 기후에 따른 간헐성, 변동성, 지역적 편차 등 재생에너지의 근본적 한계를 보완해주는 보완재 역할을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다.

③에너지 운반체(Carrier) 역할 수행: 수소는 전력 등 타 에너지원 대비 상대적으로 저장이 용이하고, 저장 용이성은 유통·경제성뿐 아니라 도심 내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이점이 된다.

④전후방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미래 성장동력: 수소는 수송 분야에서부터 전기, 열 등 에너지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미래산업 창출이 가능하다.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산업(드론·건설기계 등)과 연계가 가능해 관련 산업 시장 확대를 촉진한다.

글로벌 수소경제 전망



글로벌 수소시장 규모 전망

	기준연도	시장규모	전망기관
세계	2050	12조 달러	골드만삭스
EU	2030	1,623억 달러	EU 집행위
미국	2050	7,500억 달러	미연료전지·수소협회
한국	2050	590억 달러	매킨지

수소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미국, 독일, 일본

미국은 1970년대 오일 파동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신에너지 개발에 착수해 에너지부(DOE)가 1976년부터 수소에너지 연구개발을 본격화했으며 탄소중립 경제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 '에너지 어스샷(Energy Earthshots)'의 하나로 청정수소 수요 확대를 위한 '수소샷(Hydrogen Shot)'을 지난 2021년 6월 발표했다.

독일은 2006년 국가혁신프로그램(NIP) 기반 수소 및 연료전지 분야 기술개발 지원에 착수하고 2008년 국가 수소 연구소 'NOW'를 설립했다. 지난 2020년에는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 및 교육연구부(BMBF)에서 연간 6,000만 유로 지원금을 투입했으며, 관련 연구 269건을 지원 중이다.

일본은 탈탄소를 위한 중점 분야로 수소를 선정하고 대규모 수소공급망 구축, 수소 수요 및 활용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3월에는 수소·연료전지 전략 로드맵을 2차 발표했으며, 2020년 12월에는 그린성장전략 수립을 발표했다. ^{통상}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상시·전문적 분석 역량을 갖춘 국내 유일의 공급망 분석 전문기관으로, 2022년 2월 9일 출범했다. 정부부처,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 기업 등으로부터 수집된 주요 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을 심층 분석하고, 정부·민간의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며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를 주간으로 발간하고 있다.

OCTOBER NEWS



통상교섭본부장,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양자회담
'IRA' 등 논의

지난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무역 투자산업 장관회의가 개최됐다. 회의에 참석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G20 주요국들과 양자회담을 가졌는데 9월 23일에는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도 양자회담을 갖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양국 간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9월 7일 워싱턴DC에서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한 이후 약 2주 만에 이뤄진 것으로 IRA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엄중한 상황에서 미국 측과 고위급 협의를 지속해 실질적 해결방안 모색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안 본부장은 IRA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양자 협의 채널이 신속히 가동됐다고 평가하고, 향후 이를 통해 양측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
공식화 방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백악관 사우스코트 오디오리엄에서 화상으로 열린 반도체법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관련 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생산장비 등의 대중국 수출제한을 공식화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부과한 수출 제한도 상무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규정에 포함될 예정이며, 특정 반도체가 장착된 제품의 중국 수출 라이선싱 요건을 추후 추가적으로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미 상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인 것은 맞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의 군 현대화에 미국 기술이 이용되지 못하도록 기술 취득을 저지하고 인권침해 행위 및 기타 악의적인 행동을 막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USTR, 'G20 미니 장관회의' 소집,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논의

G20 장관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이던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9월 21일 미니 장관회의를 열어 세계 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문제를 논의했다. 타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WTO 분쟁해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모든 WTO 회원국의 실질적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현재 진행 중인 개혁 논의가 모든 회원국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이 대표는 미국의 관심 영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 개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 면제 가능성 시사

유럽연합(EU)의 프란스 팀머만스 기후담당 부 집행위원장은 EU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에서 미국이 면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CBAM 초안에 따르면, 법 적용대상 품목이 EU 배출권거래시장(EU-ETS)과 연계되거나 동일한 수준의 탄소세가 부과되는 국가에서 수입될 경우, CBAM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탄소세 등이 부재한 미국의 면제 대상 포함 여부가 논란이 됐다. 이에 팀머만스 부집행위원장은 지난 9월 20일 미국 등 온실가스 배출감축 일정 추이가 EU와 유사한 국가에 대해 CBAM 적용을 면제하는 일종의 '탄소 클럽' 방안이 협의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유럽 기업 공급망 실사 강화 불가피
적시(JIT) 물류시스템 한계 속 새 법규 도입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우 사태로 인한 공급망 충격 이후 시간 및 비용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물류시스템의 폐해가 드러난 가운데,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과 EU 공급망 실사 지침 등 공급망 관련 신규 법규 도입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유럽 기업들의 공급망 실사 강화가 전망된다. 또한 친환경 경제 전환 추진과 함께 녹색금융이 부각되면서 기업과 투자자들은 공급망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 파악이 불가피해졌다. 즉 공급망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발자국,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 그리고 근무환경 등에 대한 공급업체들의 정보가 필요하게 됐다.



USTR, 대중국 관세는
징벌적 성격 아니라 공정경쟁 도구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9월 18일, 가까운 시일 내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하 가능성과 관련해 “지난 2018년 부과된 관세는 관세의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운동장을 고르게 하려는 시도 차원의 관세”라며 징벌적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초부터 이어진 인플레이션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한 대중국 고율 관세 일부를 인하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으나 타이 대표는 행정부 내에서 대중국 관세 인하 반대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의회,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45% 상향 개정안 채택

유럽의회는 지난 9월 14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2030년 EU 에너지 믹스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45%로 상향하는 관련 지침 개정(안)을 찬성 418, 반대 109, 기권 11로 채택했다. 이번 표결은 작년 채택된 이른바 'Fit for 55' 패키지의 일부로 '2018년 신재생에너지 지침' 개정을 통해 EU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2030년 EU 온실가스 배출량 55% 절감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45% 목표는 지난 6월 EU 이사회가 승인한 40%보다 5%p 높은 것으로 향후 EU 이사회와 기관 간 협상을 통해 연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미국-EU-일본, 국제통상 시스템에서
강제노동 근절 노력 공동성명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의 통상 및 노동 장관들은 지난 9월 22일 글로벌 통상 시스템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러한 목표의 진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도 공유했다. 장관들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 강제노동 추정(Global Forced Labor Estimates) 보고서에 포함된 새로운 내용에 우려를 표하며 공동 성명을 통해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약속과 이에 부합하기 위한 국내외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장관들은 지난 G7 통상장관 회의에서도 강제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홍성민 기자]

VIDEO, SEMINAR, EDUCATION



유튜브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 주요국의 에너지 안보 정책 현황과 시사점이 궁금하다면?

세미나 '글로벌 에너지 동향과 시사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7일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세미나 '글로벌 에너지 동향과 시사점'을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주요국의 에너지 안보 정책 현황과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에너지 정책, 수요 효율화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발제자와 주제는 다음과 같다. △박호정 고려대 교수 '에너지발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안보' △강승진 한국공학대 교수 '에너지 안보 위기 속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조홍중 단국대 교수 '유럽의 에너지 위기와 합리적 전원 믹스' △노동석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세계 에너지 공급망 위기와 원전의 부상'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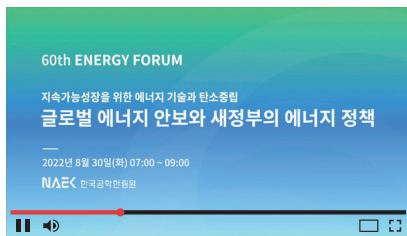


유튜브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글로벌 식량안보 위기의 대응방안이 궁금하다면?

글로벌 대전환과 식량안보 국제세미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9월 7일 '글로벌 대전환과 식량안보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코로나19와 러·우 사태에 이어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가뭄과 폭염이 전 세계 밥상 물가까지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만큼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창길 서울대 특임교수, 생야오 탕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한국사무소장, 윤선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한국사무소장, 임정빈 서울대 교수, 김윤식 경상국립대 교수, 서진교 KIEP 선임연구위원,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과장 등 국내외 식량안보 부문 전문가들이 참석해 글로벌 식량안보 위기를 진단 및 논의하고 식량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서의 한국 역할을 조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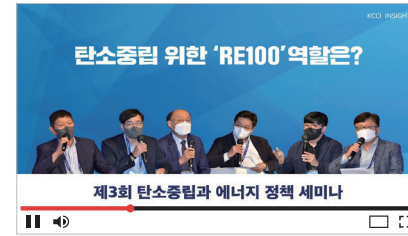


유튜브 <NAEK한국공학한림원>

▶ 신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 전략이 궁금하다면?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국내 공학기술 분야 최고 권위 단체인 한국공학한림원이 지난 8월 30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에너지포럼을 개최, 에너지 기술과 탄소중립 전략을 제언했다. 이번 에너지포럼 주제는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에너지 안보와 국제관계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고려대 국제대학원의 이재승 장 모네 석좌교수와 미국 의회의 에너지 분야 싱크탱크인 EIRP(Energy Innovation Reform Project) 폴 샌더스 회장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한양대 김진수 교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심성희 선임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향후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설정에 대해 핵심적인 전략을 제언해 눈길을 끌었다.



유튜브 <대한상공회의소 인사이드>

▶ RE100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가 궁금하다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9월 14일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3개 주제별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학계, 정부, 산업계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해 발제와 토론을 이어 나갔다. 세션에서는 오희나 경희대 교수의 '배출권거래제 진단과 개선과제' 발제 후 탄소중립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역할'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으며 세션2에서는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RE100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발제 후 '탄소중립을 위한 RE100 역할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세션3에서는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 실장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순환경제 중점 정책과제' 발제 후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경제' 역할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유튜브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불확실성 시대 한·아랍 식량안보 협력방안이 궁금하다면?

2022 한·아랍 식량안보 포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한국·아랍소사이터티(KAS), 주한아랍에미리트대사관과 공동으로 지난 8월 25일 '2022 한·아랍 식량안보 포럼: 불확실성 시대 한·아랍 식량안보 협력'을 개최했다. KIEP는 이번 포럼을 통해 아랍 주요국의 식량안보 위협요인과 정책 등을 살피고, 스마트 농업을 포함해 양자 간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아랍 식량안보 부문 전문가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했는데 세션1은 '경제 불안정과 식량안보'를 주제로, 세션2는 '한·아랍 식량안보 미래협력 구상'을 주제로 진행됐다. 

보고서로 읽는 통상의 세계

코로나 이후 주요국의 전기차 시장 동향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서 관련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중 일반 자동차 교역은 계속 감소했으나 전기차는 수출입이 모두 증가했으며, 각국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내연기관차 퇴출 목표를 구체화하며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통과된 데다 각국에서 전기차 육성을 위한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홈페이지 게재



세계경제, 퍼펙트 스톰 오는가? 글로벌 5대 리스크 요인의 항향과 시사점

최근 세계경제에 등장하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의 영향이 중첩되면서 대규모 경제위기를 의미하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2022년 하반기 이후 2023년까지 세계경제의 키워드를 'STORM'으로 정의했다. 이는 글로벌 5대 리스크 요인의 키워드인 침체(Stagnation), 무역전쟁(Trade war), 오일쇼크(Oil shock), 러시아(Russia), 통화정책(Monetary policy)을 의미한다. 리스크 요인(STORM)의 영향력이 2023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세계경제의 경기 하강 또는 침체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 홈페이지 게재



9월 호 독자의견



안○원(1090)

커버스토리 '글로벌 식량위기의 시대, 한국의 식량안보 전략은?'은 현재 당면한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심층적으로 설명해줘 매우 유익했습니다. 향후에도 이처럼 이슈가 되는 주제를 시의적절하게 다루어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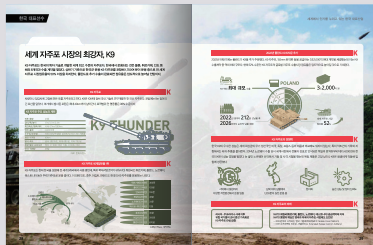
정○석(3070)

식량보호주의와 수출제한조치를 다룬 커버스토리를 관심 갖고 읽었습니다. 세계적 식량위기 시대, 식량주권 확보가 국가경쟁력이자 국가 존립인 시대입니다. 식량자급률 제고와 수급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호(8452)

월간 <통상> 한 권만 제대로 정독하면 경제전문가 부럽지 않게 세계의 통상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반도체 부문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호 '글로벌 톱'을 알차게 읽은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김○경(9135)

'세계 자주포 시장의 최강자, K9'을 읽고, 국산 무기체계의 우수한 성능과 가격경쟁력 등 한국의 방산 역량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최고 전략산업인 방위산업이 더욱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월간 <통상>은 웹진(tongsangnews.kr), 뉴스레터와 카카오톡 채널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독자의견, 모의고사 응모, 구독신청, 주소변경은 웹진으로 보내주세요.

매월 독자의견 5분, 모의고사 정답자 15분, 뉴스레터 신규 신청자 5분 등 총 25분을 선정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선물은 익월 10일경 발송, 개별 통지)

문의: sh961443@hankyung.com

월간 <통상> 모의고사

월간 <통상>을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가벼운 마음으로 풀 수 있는 통상 모의고사를 준비했습니다.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100점의 즐거움을 누리 볼까요? 100점 맞고 상품도 챙기세요.

1 과거 영국의 파운드, 오늘날 미국의 달러 등과 같이 여러 국가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국제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통화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 ①기축통화 ②기본통화
- ③기대통화 ④주력통화

2 서아시아(중동)의 아라비아반도에 위치한 왕국으로 인구 대부분이 아랍어를 사용하고 이슬람교를 믿는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 ①이란 ②이라크
- ③사우디아라비아 ④예멘

3 25km/h 미만의 속도를 내고 내연기관을 장착하지 않은 소형 및 경량 이동수단을 통칭해 무엇이라고 할까요?

- ①스마트 모빌리티 ②마이크로 모빌리티
- ③매크로 모빌리티 ④메가 모빌리티

월간 <통상> 모의고사 OMR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똑똑하면 낙낙樂樂하다!

KNOCK KNOCK FTA



FTA활용,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지금 전화하세요!

FTA상담 콜센터 국번없이 1380

FTA활용의 어려움, 해결하고 싶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FTA활용의 모든 것, FTA통합플랫폼 okfta.kita.net

FTA활용의 PARTNER

산업통상자원부, FTA종합지원센터, 지역/해외 FTA활용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FTA상담, 컨설팅, 교육/설명회 등 다양한 FTA활용 지원사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 뉴스보다 쉽고 재미있는
통상 이야기로 여러분과
통하는 세상을 엽니다 ”



‘월간 통상’을
검색하세요



웹진 월간 <통상>
tongsangnews.kr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월간 통상>



통상교섭본부
SNS 채널도 꾸욱!



유튜브 <통상TV>
youtube.com/tongsang



페이스북 <통하는 세상>
facebook.com/tongsangnews

페이스북 <통상교섭본부장>
facebook.com/motieviceminister2



블로그 <세계로 통하는 세상>
blog.naver.com/tongsangnews



산업통상자원부